# 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1년 1월 8일 금요일
etoday.co.kr

제2552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박용만 회장 "지나친 경제 낙관 경계해야" 12

편의점 '설 선물' 골드바에 집까지 14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 코스피(7일) 3031.68(+63.47P)
▲ 코스닥 988.86(+7.47P)
▲ 환율(달러당 원화) 1087.30(+1.7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0.964%(+0.011%P)

# 3000시대 열렸다…'동학 불개미'의 힘

### 코스피 2.14% 오른 3031.68
### 2000 돌파 13년5개월 만에
### 시총 나흘 연속 2000兆 지켜

코스피 3000시대가 활짝 열렸다. 출범 38년 만이다. 시가총액도 나흘째 2000조 원를 지켰다. 제로금리로 시중에 흘러넘치는 유동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동학개미의 진격, 경기 회복(국내 기업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라는 삼두마차가 새 역사를 썼다. ▶관련기사 4·9·15면

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63.47포인트(2.14%) 오른 3031.68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3000을 넘어선 것은 2007년 7월 25일 2000대를 돌파한 이후 약 13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주인공은 '동학개미'가 아니었다. 1조1000억 원을 순매수한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다만 코스피 3000 시대를 여는 데 동학개미의 공이 컸다는 데 이견은 없다. 초저금리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속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개인 자금이 증시로 몰려들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개미들은 상승장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 3조1822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주식 거래가 있는 '주식활동 계좌' 수는 3548만 개다. 지난 한 해 동안 612만 개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6일 기준 68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초 30조 원대에서 2배 이상으로 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 원(거래비중 65.8%)으로 2019년에 비해 5조7000억 원 늘어났다.

최근 상승 랠리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 해외 IB 9곳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3.4%다. 한 달 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오른 값이다. IB 9곳 중 7곳이 종전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고, 2곳이 올려 잡았다.

한국 증시의 매력도 커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가부도위험을 뜻하는 CDS 5년물 프리미엄은 5일 기준 23bp를 유지하고 있다. CDS프리미엄은 2008년 금융위기 때 500bp를 넘어서기도 했다. 향후 글로벌 자금 유입의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K방역' 효과로 빠르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꼽혔던 주주 환원이 늘고 있는 점도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 실적의 순환적 회복, 글로벌 리플레이션, 외인과 개인의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코스피지수는 3300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버핏지수'(국내총생산 대비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율)가 추세에서 표준편차를 벗어난 국면"이라며 "이런 국면은 2000년대 이후 정보기술(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등 두 번에 불과할 정도로 쉽게 오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 북극發 최강 한파…주말까지 '꽁꽁'

한파 경보가 발효된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이 간밤에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해 있다. 뉴시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3년 만에 내려진 한파경보는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는 전날 오후 7시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 9시 기준 3.8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폭설로 인해 도로에서는 차량 충돌 사고가 이어졌다. 폭설에 맹추위까지 겹치면서 계량기 동파 등 크고 작은 물적 피해가 났다. 현재까지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기상청은 "8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이라며 "다음 주 초반까지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오늘부터 아동대상 허용

### 노래방·대형학원 등 17일 재개 검토

8일부터 헬스장, 축구교실, 수영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교습 목적의 아동·청소년으로만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과 대형학원 등도 17일 이후 운영이 재개된다. ▶관련기사 6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조치 개선은 업종 간 형평성 논란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불구하고 돌봄과 관계된 소형학원·교습소와 태권도장 등은 '아동·학생 대상 교습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됐지만, 미신고 체육도장과 헬스장, 대형학원 등은 시설 면적이나 밀집도와 관계없이 영업이 금지돼왔다. 노래연습장 등은 2.5단계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돼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중대본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대상으로 소형학원, 태권도장 등과 같은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노래연습장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역당국은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이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을 21일까지로 2주 연장키로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전체 신규 확진자는 870명으로 확인됐다. 국내 발생 833명, 해외 유입은 37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046명으로 전날보다 19명 늘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사상 초유 의사당 난입…일그러진 美 민주주의

### 의회, 날짜 넘겨서 바이든 당선 확정
### 트럼프 "질서있는 권력이양" 물러서
### 워싱턴시, 취임까지 비상사태 선포

세계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미국 의회 의사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세계가 사태의 화근이 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은 물론 미 내부에선 '트럼프 재탄핵론'까지 부상했다. ▶관련기사 3면

6일(현지시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의회 의사당에서 상·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하기 위한 합동 회의를 시작할 무렵,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명이 몰려들었다. 경찰과의 대치 끝에 시위대 일부가 바리케이드를 넘어 건물에 진입, 상원의장석을 점거했다. 의사당 주변을 바리케이드로 둘러싸고 대기하던 경찰이 최루가스와 스프레이까지 발사하며 제지했지만 이들을 막지 못했다. 이 장면은 TV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고스란히 중계됐다.

회의는 개시한 지 1시간 만에 중단, 바이든의 승리 인증도 미뤄졌다. 상·하원은 약 4시간 만에 의회로 복귀해 대선 결과 인증을 재개했다. 미국 역사상 의사당이 개별적 테러나 시위에 노출된 적은 많았지만, 적의를 품은 세력에 의해 점령당한 것은 1814년 영국군의 워싱턴D.C. 침탈 이후 20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결국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로 날짜를 하루 넘긴 7일 새벽에야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최종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마지막 절차인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에 무릎을 꿇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한 직후 그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성명에서 "선거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팩트(사실)는 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1월 20일 질서 있는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은 20일 열린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시위대 난입 사태로 6일 오후 6시부터 통금령을 내린 데 이어 2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15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 법사위 통과…5인 미만은 제외

임시국회 최대 화두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위를 대폭 낮췄다. 정의당과 시민단체, 경제계 모두 '졸속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관련기사 5·16면

여야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약속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9일부터 5차례 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정의부터 세부 조항과 부칙까지 논의해왔다.

소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물론 정부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손해배상액은 5배 이하로 결정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을 적용키로 했다. 법 시행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3년 유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5인 미만은 당연히 제외하면 안 된다"며 "본회의를 앞두고 독소조항을 없애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상 기자 jooooon@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4.5평에 11명 '다닥다닥'… "돼지도 이렇게 안 가둬"

### 지방 재소자, 이투데이 편지

### 동부구치소 분산 수용 조치에 타 교정시설 과밀현상 부작용

### "접견·목욕 못하고 방에 갇혀 인권 보장되는 것 맞나" 호소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재소자 분산 수용 조치로 다른 교정시설에 과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정시설은 한 방(혼거실)에 재소자를 무리하게 몰아넣어 생활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A 씨는 7일 가족을 통해 이투데이에 보낸 편지에서 "돼지들도 이렇게 가둬두지 않는다. 정말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조금 전에 신입이 와서 15㎡(약 4.5평) 거실에 11명이 지내게 됐다"며 "이게 사람 사는 곳인지 죽으라는 건지 정말 괴롭고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접견과 목욕 등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에 갇혀 있어야 한다"며 "한 사람당 자리가 0.5평도 안 되는 공간에 있으라니 이것이 인권에 맞는 짓인지 모르겠다(인권이 보장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6차 전수검사 결과 66명 늘어났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에 격리된 수용자는 총 1060명이다.

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들 따뜻한 밥 좀 먹게 해 주세요'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정원 대비 수용률은 지난달 초 116.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용자들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송한 결과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총 2292명이었던 구치소 내 인원은 1320명까지 줄었다. 수용 밀도는 63.7%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강원북부·서울남부·여주·영월교도소로 분산 수용했다. 이 가운데 전날 영월교도소 7명, 강원북부교도소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재검사 후 확진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용자를 이송했지만, 오히려 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이송으로 인한 다른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또 다른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률을 빠르게 낮춰서 접촉자들을 격리하는 것이 시급해서 분산 수용한 것"이라며 "사전에 이송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격리 구역을 설정해 동선을 차단하고, 전담 근무자도 편성하는 등 일체의 접촉이 없도록 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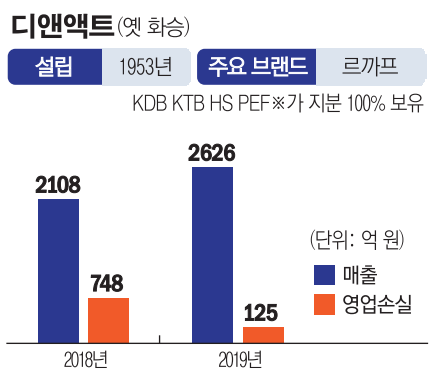
김종용 기자 deep@

〈現 디앤액트〉

# 산은 '르까프' 화승 매각 추진… '투자 실패' 꼬리표 떼나

### 지분 100% 확보로 위기 선제 대응 경영 참여했지만 회생절차 뭇매

### 아웃도어 시장 업황 개선 미지수 매각 대금 따라 투자 성패 갈릴 듯




산업은행이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로 알려진 화승그룹을 매각한다. 산은은 2015년 선제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모투자사를 만들어 화승 지분을 전량 가져왔다. 이후에도 화승은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밟았고 지난해부터 사명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신발 제조 및 유통사 디앤액트(옛 화승)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잠재인수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KDB KTB HS PEF가 보유한 디앤액트 지분 전량이다. 산은 관계자는 "매각을 모색 중이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산은은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인 KTB PE와 손잡고 사모투자합작회사(PEF)를 설립해 화승의 지분 100%를 가져왔다. 총 2463억 원 규모였고, 산은은 이 중 250억 원을 출자했다. 화승그룹이 인수금액의 반을, 나머지는 국내 유학책임조합원(LP)으로 현대해상과 농협 등이 참여해 부담했다.

당시 산은의 화승 투자는 여러모로 논란을 낳았다. 화승은 실적이 안정적이지 않았을 뿐 회사는 정상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산은은 "기업이 망가지기 전에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감행했다. 산은은 공동 GP로 참여해 화승 이사진의 추천권을 가지는 등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산은은 이러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투자차익을 얻고자 했다. 회사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진 뒤에는 투입되는 비용이 많고,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투자가 성공적일 경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미지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와 달리 화승은 지분을 넘긴 지 4년 만인 2019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유동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산은의 화승 투자도 '실패'란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 이후 산은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경영에 참여한 것에 대한 책임 논란도 피하지 못했다.

화승은 법정관리를 지난해 4월 졸업했다. 상호도 화승에서 지금의 디앤액트로 변경했다. 회생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관리 중이던 2019년 한 해에는 262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손실도 전년과 비교해 개선됐다. 산은의 선제적 구조조정의 효과가 일부 있었던 셈이다.

다만 투자금을 얼마나 회수할지는 의문이다.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 시장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은도 우선 저렴하게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매각 대금에 따라 산은의 화승 투자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디앤액트는 1953년 동양고무공업주식회사로 시작했다. 한국 신발 1호로 알려진 기차표 고무신을 만든 곳이다. 1986년에는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론칭해 운영해왔다. 케이스위스, 머렐 등 해외 브랜드 유통도 맡고 있다. 곽진산 기자 jinsan@

# 트럼피즘에 쑥대밭 된 의회… 각국 정상 "이건 美 아니다"

### '민주주의 심장'서 전례 없는 유혈… 英총리 "수치스러운 장면"
### "도둑질 멈추게 할 것" 트럼프 발언 '폭력사태 진앙지'로 지목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미 의회 최종 인증'을 저지하려고 몰려든 트럼프 지지자들로 인해 의회 의사당이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이 쏜 공포탄으로 의사당 주변에 연기와 불빛이 자욱하다. 오른쪽 사진은 성조기를 들고 의회에 난입한 시위대 모습. 워싱턴D.C./로이터AFP연합뉴스

"분노한 폭도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의 심장부를 덮치자, 전 세계는 상상도 못 했던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실망과 불신의 눈으로 지켜봤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상·하원 합동 회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으로 긴급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렇게 묘사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맹주국을 자처하던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이양에 실패하는 순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미국 국민과 전 세계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미국 의회에서 전례 없는 시위대의 혼돈과 폭력이 발생한 상황을 지켜보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날 의회 의사당에서는 바이든의 11·3 대선 승리를 확정 짓는 상·하원 합동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에 쳐들어가 난동을 부렸고, 물리적 충돌 속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결국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를 직접 나서서 규탄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빗발치자 사태 발생 약 2시간 만에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여러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평화를 유지해야 하고,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해산을 당부했다.

정계 안팎에서는 결국 그들의 난입을 부추긴 것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시위대 앞 연설에서 "우리는 도둑질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해 지지자들이 의회로 향하도록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입증되지 않은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되레 끊임없이 그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는 수십 차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주를 상대로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재검표하라고 압박했다. 의회 폭력 사태가 터지기 전날에는 상원 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선택된 선거인단을 거부, 일종의 '반란'을 일으켜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키워온 분노의 불길에 역사상 단 한번도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큰 상처를 입었다.

미국 온라인매체 복스(Vox)는 "양당제에서 민주주의는 두 정당이 모두 선거 게임의 규칙을 따르는 데 달렸다"며 "트럼프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경종을 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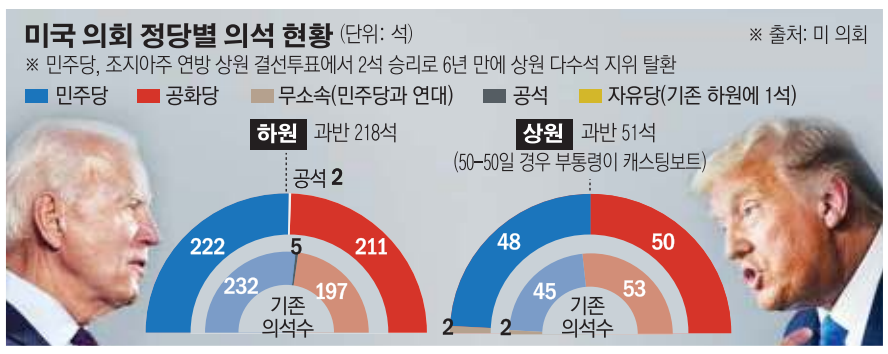
시위대의 의회 난입 소식에 전 세계 지도자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정상마저 이번만큼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에 "수치스러운 장면"이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또한 "분 단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에선 중요한 선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우리 모두 평화롭게 상황이 전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일어난 것은 확실히 미국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의 견실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내전과 쿠데타, 폭동 등으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남미 국가들도 미국의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우리와 공유한 법치주의 가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대선·상원·하원 승리〉

## 美 민주당 '트리플 블루' 힘 받는 '바이드노믹스'

### 경기부양책 기대감… 美증시↑

미국 민주당이 결국 '트리플 블루(Tripple crown+Blue wave)'를 달성했다. 조지아주 상원의원 두 석이 걸린 결선투표를 싹쓸이하면서 백악관에 이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장도 '트리플 블루'에 기대감을 보였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한 끝에 민주당 후보가 모두 이겼다.

조지아주 두 석을 보태면서 민주당의 상원 총 의석수는 50석으로 늘어났다. 공화당도 50석을 확보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캐스팅보트권을 쥐고 있어서 민주당이 사실상 상원 과반이 됐다.

의회 지형 변화로 민주당의 숙원 사업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전 의회에서 민주당은 하원을 주도했지만, 추진 법안은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트리플 블루'에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추진한 기업 감세 조치를 뒤집을 수 있는 만큼 증세와 규제 우려에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하락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공격적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가 불안을 넘어서며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500지수도 올랐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상·하원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는 '블루웨이브'가 펼쳐지면 6000억 달러(약 651조18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최근 국민 1인당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금융 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은행과 청정에너지, 대마초를 '트리블 블루'의 최고 수혜 업종으로 꼽았다.

바이든의 핵심 공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부 지출 확대, 재생에너지 추진 등이다. 이 중 정부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형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대세 상승 2막 기대에 '전국민 투자' 신드롬

"와~ 코스피 3000이라니. 내 생에 볼 줄은 몰랐다."

코스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이틀 연속 3000선을 뚫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지난 6일 3000선이 무너지자 속앓이하던 낙관론자들은 '삼천피'(종가기준)에 올라서자 목에 힘을 주며 연신 싱글벙글했다. 지난해 3월 첫날 200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그달 19일 1457.64포인트까지 하락하며 연중 저점을 찍었다. 반등을 시작한 건 11월부터다. 장이 열린 46일 중 지수가 하락한 것은 단 열하루뿐, 764포인트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시장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한다. 유동성 파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대세 상승의 초입이란 기대가 앞선 모습이다. 삼성증권(2100~2850→2700~3300), 신한금융투자(2100~2700→ 3150~3200) 등 증권사들은 눈높이를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경기 회복과 국내 기업의 빠른 펀더멘털 정상화 근거다. 단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넘치는 유동성, '동학개미' 폭풍 매수= "0%대 정기예금 금리에 (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지속하는 한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질 수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코스피는 2019년부터 2250을 넘지 못했다. 2018년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2018~2019년엔 미·중 무역갈등이 있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7일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3000 돌파'를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연합뉴스

**부동산 규제로 투자 풍선효과**
**지난해 11월부터 연일 상승세**
**'동학개미' 3조1827억 순매수**
**증권사들 올 3300선까지 전망**

지난해 초 2250을 잠시 넘어섰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3월 최저점(19일 1457.64)을 찍고 반등이 시작됐다. 처음엔 헬스케어, 그다음엔 IT·소프트웨어·필수소비재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 뒤로는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관련주가 나왔다.

2018년과 2020년의 가장 큰 차이는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미·중 갈등,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깊어지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꾸준히 낮춰왔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터지자 한국은행은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2018년 말 1.75%까지 올라갔던 기준금리는 이후 4차례나 인하되면서 현재 0.5%까지 떨어진 상태다. 시중금리 지표가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8년 상반기만 해도 2% 위에서 움직였으나 지금은 0%대에서 놀고 있다.

코스피 3000시대의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는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초저금리에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 이날 개미들은 1조1732억 원 가량 매물을 토해내며 차익을 실현했지만, 11월 이후 3조

**주가 3000 시대 정착되면**
**혁신선도형 경제로 점프 발판 마련**
**1인당 소득 '5만 달러 시대' 단축**
**벤처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관건**

1827억 원가량 순매수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실탄인 투자자 예탁금은 6일 기준 68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2018년 평균(26조6676억 원)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 기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투자자금을 증시로 이동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에서는 투자 목적 부동산 매수가 줄어들며 이러한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5만 달러 시대 밑거름= 그간 국내증시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수십 년째 이어진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의 이유로 고질적인 저평가와 함께 '박스피'(박스권 코스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이른바 'K방역'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되고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면서 한국경제가 선진국 추격형 성장 모델을 탈피, 혁신 선도형 경제로 퀀텀 점프할 발판이 마련됐다고 분석한다. 코스피 3000시대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자산 효과가 발생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소득 역시 3만 달러를 넘어서 5만 달러 시대까지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7년 3만 달러를 넘은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간신히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가 3000시대 정착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은 필수적이다. 벤처기업으로 돈이 유입돼 이를 밑거름 삼아 성장하고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증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은 성장성·수익성·안정성으로 가치가 결정된다.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짠물 배당'과 같은, 여전히 남아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코스피 쏘아올릴 방아쇠, 배당·지배구조 개선

**삼성·현대차 기업가치 상승 열쇠**
**주주 환원 정책 갈수록 확대 추세**

코스피가 65년 만에 '삼천피'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 실적을 떠받치는 반도체 슈퍼 호황이 예고되면서 코스피가 3000에 안착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쏟아진다. 다만 한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려면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다양한 주주환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시참여자들은 올해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주식 재산을 물려받게 된 유족의 최종 상속세가 11조 원으로 확정되면서 올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다. 현재 정 회장의 지분은 현대차 2.62%, 기아차 1.74%, 현대모비스 0.32%, 현대글로비스 23.29% 등이다. 시장에서는 정 회장이 대주주의 작은 지분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본다. 특히 주주 동의를 얻기 위해 미래 성장성 입증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증시의 맏형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주가가 올라야 코스피도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은 외국인의 발길을 돌릴 흡입 유인으로 꼽힌다. 삼성물산이 지난해 11월 이후 30% 가까이 오른 것도 사주일가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배구조 시 삼성물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몇 해 전 외국계 증권사 CLSA에서는 2022년 코스피가 4000선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주장의 주된 논거는 지배구조 개선이다. 지배구조 개선으로 기업의 자본이 효율적으로 쓰이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비롯한 수익성 개선과 배당 증대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가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해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을 벗어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다. 규제당국은 경영권을 안정화하고, 경영진은 투명경영에 힘쓰며, 투자자는 공정 투자를 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3000시대를 항해하는 또 다른 핵심 동력으로는 단연 '주주환원책'이 꼽혔다. 바로 배당이다. 2020년 코스피200 상장 기업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의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20% 수준에서 크게 높아졌다.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코스피 배당성향이 30~40%를 유지한다면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가 최고 15.7배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국내처럼 수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과 대만의 주요 지수의 사례와 비교했을 경우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PER 15.7배를 적용할 경우 코스피 목표치는 3080이 된다"고 전망했다.

손엄지 기자 eoml@

## 코스피 상승률 30.8% 작년 G20 국가 중 1위

코스피 '2000 시대'에서 '3000 시대'까지 걸린 기간은 13년이다.

코스피가 사상 첫 '이천피' 문턱을 넘은 건 2007년 7월 25일. 당시 주가는 2004.22였다. 빠른 경제 회복과 적립식 펀드 열풍,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대한 기대가 주가 상승의 동력이었다.

그러나 일일천하로 끝났다. 한 달 뒤인 8월 17일 1638.07까지 밀렸다. 그해 10월에서야 2000선을 되찾았는데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2000선을 넘은 거래일이 19일밖에 안 됐다.

코스피는 이후 점차 하락세를 타 세계 금융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은 2008년 10월 938.75(2008년 10월 24일)까지 떨어진 후 2010년 12월 14일(2009.05)에야 2000선을 회복했다.

이로부터 약 5년여 동안 1800~2200대 박스권에 갇혀 등락을 거듭하며 지루한 '박스피' 양상을 이어갔다. 2017년 들어 세계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그해 10월 30일(2501.93) 2500선을 처음 넘어섰다. 이후 코스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주춤했다.

올해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1457.64(3월 19일)까지 주저앉았다. 그런데 이 같은 위기를 기회로 인식한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 뛰어들며 이른바 '동학개미' 붐을 일으켰다.여기에 세계 각국 당국이 '제로금리' 등 공격적 부양책으로 뒷받침하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급반등했다. 작년 한 해 상승률은 30.8%다. 주요 20개 국(G20) 국가별 대표 증시 중 상승률 1위다. 올해 첫 개장일에 2874.5로 출발한 코스피는 6일 장중 3000선을 터치했고, 7일 3000선에 안착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오락가락 외국인, 문제는 환율

"외국인이 오락가락하는 게 좀 불안하네요."

최근 주식투자 관련 커뮤니티와 온라인 채팅방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향후 움직임을 묻는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 증시 오르내림과 상관없이 외국인은 '사자·팔자' 갈지(之)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떠받치고 있지만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증시의 추세적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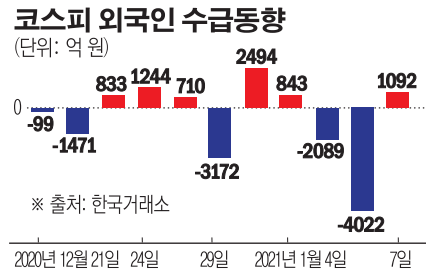
7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109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피 3000시대를 여는 데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날 4000억 원가량 팔면서 3000시대를 여는 데 재를 뿌렸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이다. 월별로도 지난해 11월 상승장에서 외국인은 4조9938억 원어치

**1월 매수 강도 예상보다 덜할 듯**

를 샀다. 하지만 12월 1조7538억 원가량 팔아치우며 발을 뺐다.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코스피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동학개미가 밀어올린 증시 반등은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외국인이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상황을 거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일단 현금을 쥐고 사태를 관망하려 한다는 것이다.

코스피가 3000선에 올라섰지만, 주식시장에 2차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외국인 수급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기존에 글로




벌 증시 충격이 질병 자체의 확산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후 소비 감소→기업실적 악화→신용도 하락 및 부도로 이어지는 부정적 사이클이 한동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최근 오락가락한 외국인 수급 동향에는 환율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글로벌매크로팀장은 "지난해 1080원까지 내린 환율이 최근 1100원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외국인 사이에서 환 손실 리스크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겠지만 1월 매수 강도는 예상보다 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외국인 수급 동향 역시 환율 변동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증권가는 올해도 약 달러 기조가 이어진다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나친 원화 강세는 증시에 걸림돌이다. 원화 강세는 외국인 자금 유입 요인이지만, 수출 경쟁력이나 기업 실적 측면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국내 기업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가능성도 줄 수밖에 없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사망사고 땐 경영자 징역 1년 이상·벌금 10억 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뭐가 달라지나

**법인은 벌금 50억 이하 부과**
**5인 미만 기업·공무원 처벌 없어**
**손해배상액 정부안과 같은 5배**
**법 제정되면 원청 책임 불가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하며 경영책임자들이 산업재해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게 됐다.

여야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중대재해법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법안은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합의한 만큼 별 이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졌다. 징역 수위를 낮추고 벌금 하한선도 삭제했다. 다만 징역과 벌금을 함께하도록 임의적 병과를 가능하게 했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 시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과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선 "공무원의 감독행위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고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부연했다.

손해배상액은 정부안과 같은 5배 이하로 결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장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백 의원은 "처벌 조항에 5년 이내에 사고가 있었던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유예 관련 부칙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로 정하면서 마무리됐다. 법 시행 시기를 공표 후 1년으로 결정했기에 사실상 3년 유예나 다름없게 됐다. 백 의원은 "영세한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라며 "(원청업체라면) 유예기간 안에라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면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하면서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구의역 김 군이 사망했을 당시 이번 법안이 있었다면 김 군이 속한 하청업체 은성PSD의 원청인 서울메트로 대표도 큰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다. 당시 서울메트로 대표의 처벌은 벌금 1000만 원에 불과했다. 고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이번 법안이 있었다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다만 수위가 낮아진 만큼 이번 법안에 빈틈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1년 이상이라고 해도 징역이 진짜 징역살이를 하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의결에 들어간다. 법이 통과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후 공포된다. 이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박준상 기자 jooooon@

#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유감·참담"

## "추가 입법 절차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 반영해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다시 강력 반발했다. 경영계는 추가적인 입법절차 중단과 함께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며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헌적·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최소한 5가지 사항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필요 등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 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는 국내 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통과한 제정안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일로부터 3년 후 시행되는 것을 두고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 실태가 열악한 점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산재사망 年 2000명, 반드시 필요" "현장 적용 부적절…형사처벌 과해"

## 전문가 의견 '분분'

**"그동안 법행정으로 해결 안돼 법 제정돼야 사고 없어질 것"**

**"예방에 초점 둬야 하는데 법안은 처벌에만 역점 아쉬워"**

연초부터 뇌관으로 떠오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재계와 노동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하는 이슈인 만큼 찬반이 갈린다.

이투데이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전문가 3명으로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우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매년 20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법행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특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한 점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들에 그만큼 큰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시그널을 명확하게 줘야 원청이 하청도급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부담 완화, 입법 유예 등이 이어지면 사건·사고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적 틀 마련과 그에 따른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산업현장의 안전·생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고, 효율적인 현장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영국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못지않게 산재가 매우 빈번했지만, 이른바 '기업살인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안전국가로 변모했다. 이 교수는 "물론 이 법으로 인해 사고 난 여러 기업이 파산하고 문 닫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적은 법 제정으로 가장 빨리 산업안전국가가 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 교수는 "법의 4분의 3은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하는데, 정부의 법안은 오로지 처벌에만 역점을 뒀다"며 "처벌에만 너무 중점을 두는 법은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예방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를테면, 각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가 되고, 그것이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는 쪽으로 가면 되지, 미리 금액을 정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사고 발생 시, 공무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자체는 필요하되, 형사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 교수는 "법안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기업의 부담과 책임을 적절한 수준에서 묻는 건 맞지만, 경영진 형사처벌 부분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내세우는 등 부작용,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며 "또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박준상 기자 jooooon@

# 민주당, 당원 50%·국민 50% 경선룰 확정…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우상호 투톱"

## 서울시장 후보 2월 말, 부산시장 후보 3월 선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권리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4월 재보궐 선거 경선 룰을 확정했다.

이는 기존 경선 룰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외부수혈'을 하지 않고 현재 후보군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해당 경선 룰은 8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선거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원 50%·국민 50%와 여성 후보자 가산점 등 큰 틀은 유지하고 신인 참여 및 흥행을 위한 세부 규칙 등은 서울·부산시 선거기획단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선이 진행되면 서울시장 후보는 2월 말, 부산시장 후보는 3월 즈음 정해질 것이라는 전언이다.

즉, 서울과 부산이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른 경선 룰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강 대변인은 우선 부산에 대해 두 차례 경선을 치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차에서 일정 숫자의 권리당원과 주민이 투표해 그 결과를 바로 공개한 뒤 시간을 조금 두고 2차 경선을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시민평가단'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경선 과정에서 시민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시민평가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은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과 막판 고심 중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투톱'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른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기존 경선 룰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박 장관과 우 의원이 경합을 벌이는 구도가 될 것"이라며 "이들을 내세우고 어떻게 흥행시킬 수 있을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 앞서 윤호중(네 번째)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는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상 열세가 후보 탓이 아니라는 선거기획단의 판단에서다. 선거기획단 소속 한 의원은 "지지 열세는 정책 불만 탓이지, 후보 탓이 아니다"고 했고, 한 최고위원도 "외부인사를 염두에 두고 억지로 경선 룰을 바꾸면 부작용만 나온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접전이 아닌 박 장관이 우 의원을 압도할 전망이다. 여론조사상에서도 박 장관이 우세하지만 여성 가산점제로 10% 가산도 받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박 장관이 가산점을 받아 우 의원을 제치고 2위를 한 바 있다.

김윤호 기자 uknow@

# 전국민 재난지원금 '4인 100만원' 지급하나

### 여권 선거 앞두고 논의 급물살… 국민 70%도 "찬성"
### '반대' 野 바뀔 가능성… 12조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정치권에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1차처럼 최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은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 70%도 찬성하고 있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1차처럼 지급하려면 14조3000억 원이 필요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가뜩이나 급증한 국가채무 속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8.1%로 집계됐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은 30%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만이 공감 53.9%에 비공감 42.4%로 격차가 적었고, 나머지 권역들은 모두 공감한다는 답이 70%대에 달했다.

4차 재난지원금이자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물꼬를 놨다. 이 대표는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 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그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급을 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야당은 4월 재보선을 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1차처럼 향후 찬성 기류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작년 4·15 총선서 여당이 톡톡히 재미를 봤기에 야당도 선거가 임박할 경우 역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르면 4월 전후 늦어도 6월에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미 올해 예비비를 가져다 썼다. 올해 일반예비비는 1조6000억 원, 목적예비비는 7조 원인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매(2000만 명분) 지원에 목적예비비만 5조6000억 원이 쓰였다. 향후 300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하려면 산술적으로 1조2900억 원이 더 필요해 예비비는 2조여 원만 남는다. 결국,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12조 원이 넘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분석해 30%만 소비에 썼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효과가 없다는 측과 소비 진작 효과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타격이 큰 분들이나 저소득층에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문대통령 "새해는 통합의 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회복과 통합, 도약의 해"라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3명 추가…해외 입국력 없는 첫 사례

### 영국발 항공편 제한 2주 연장
###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추가 검사 음성 확인까지 격리

7일까지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국내 확진환자는 총 15명이다. 이 중 14명은 영국발, 1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유입 사례다.

이날 추가된 3명은 2일 확인된 확진자 1명의 일가족이다. 곽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분(지표환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이분에 대한 접촉자 조사가 추가로 있었는데, 입국한 이후에 자택에 들어와 있는 과정에서 가족 4명과 접촉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그중에 오늘 3명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고, 나머지 1명도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로부터 입국 이력이 없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이번이 첫 사례다. 다만, 가족 외 접촉자가 없어 추가 확산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한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항공편 중단을 2주 연장하는 데 더해, 12일부턴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추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를 유지한다.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와 격리를 시행하고,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 금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105개 병원에서 3108명의 환자에게 공급했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선 임상 2상 시험이 13개 의료기관에서 64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렘데시비르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 저널에서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렘데시비르가 사망률을 줄이지 못한다는 주장들이 한 번 발표된 바 있다"며 "(하지만) 렘데시비르가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승인을 받았고, 또 잘 조절된 이중맹검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연구결과 도출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일단 계속해서 현재의 진료지침을 유지하도록 국내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영

# 해외 IB, 한국 올 성장률 3.4% 전망… 전월比 0.1%P 올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P) 높였다. 지난해 성장률은 -1.1%를 유지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 해외 IB 9곳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3.4%를 보였다. 이는 한 달 전 전망치보다 0.1%P 상향된 것이다.

크레디트스위스가 2.9%에서 3.6%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렸고, HSBC도 2.2%에서 2.7%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종전 수치를 유지한 UBS가 4.1%로 전망해 가장 높게 봤고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3.6%, JP모건(3.5%), BoA-ML(3.4%), 바클레이즈(3.2%), 씨티(3.0%) 순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성장률은 -1.1%를 유지했다.

2022년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8%였다. UBS가 가장 높은 3.8%를 내놨고 JP모건(3.5%)과 씨티(3.4%)가 3%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바클레이즈(2.7%), 골드만삭스(2.5%), HSBC, 노무라(이상 2.0%)가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19년 -1.1%, 올해 3.2% 성장을 전망한 바 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 청년 5만명에 IT 일자리 제공

### 고용보험 가입 5인 이상 기업 대상… 월 180만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만 15~34세)에 대해 올해 5만 개의 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이뤄진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추경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올해에는 청년 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 유형은 콘텐츠 기획형,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나뉜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1~4인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일자리 유형에 부합하는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월 지급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180만 원의 인건비와 10만 원의 간접노무비가 지급된다. 월 지급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이면 지급 임금의 90%를 인건비로 지급한다. 간접노무비는 동일하다.

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정부가 지정한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 무보, 사우디에 3.3조 금융 지원

### 500조 프로젝트, 韓기업 참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500조 원 규모 대형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0억 달러(3조3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금융지원에 나선다.

무보는 사우디 재무부에 30억 달러 규모의 '해외사업금융보험'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해외사업에 대해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사우디 재무부의 원리금 미상환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무보는 지난해 2월 사우디와 국내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사우디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중장기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500조5000억 원 규모의 '네옴 스마트 시티(Neom Smart City)' 건설 프로젝트와 8조8000억 원의 키디야(Qiddiya)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조성 등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국내 업체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

네옴 신도시는 사업비 규모만 500조5000억 원에 달하며 국내 여러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키디야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는 총사업비 8조8000억 원을 투입해 테마파크, 실내스키장 등 호텔, 쇼핑 시설을 갖춘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보가 제공하는 해외사업금융보험을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금은 국내 기업의 공사 관련 대금 결제 및 기자재 수출에 사용된다.

거액이 필요한 메가 프로젝트일수록 원활한 금융 조달이 수주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이에 무보는 국내 기업이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은 무보의 금융지원을 통해 사우디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사우디도 금융 조달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중동 지역 등에서의 대규모 경기부양 프로젝트가 국내 기업의 수주 회복을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우량 발주처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확대하는 등 선제 금융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극복

몸과 마음을 위한
건강회복

전염병의 끝을 위한
질병정복

2021년 모두를 위한
전화위복

하나로 힘을 모을 때
새해의 행복은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잠시 멈춤'으로
코로나19를 멈춰주세요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중국 3대 이통사 증시퇴출
알리바바·텐센트 투자금지

# 트럼프, 막판 '對中 공세'로 차기정권에 대못

## NYSE, 정부 압박에 결국 상폐 결정
## IT 양대기업 블랙리스트 추가 검토
## 일각선 '퇴임전 마지막 광기' 쓴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2주가량 앞두고 대중국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가 차기 정권에 흠집을 내기 위한 '퇴임 전 마지막 광기'라는 말마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압력을 넣어 결국 중국 3대 이동통신사를 퇴출시켰다. 중국 IT 업계 양대 산맥인 알리바바그룹과 텐센트홀딩스를 견제하는 조치도 잇따라 내놓거나 흘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NYSE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중국 3대 이동통신사를 다음 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다. NYSE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1일 오전 4시에 거래가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협력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업 31개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과 미국인, 기업의 거래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도 중국해양석유(CNOOC) 등 중국 국영 대기업 4개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트럼프 정부는 중국 IT 산업은 물론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대한 포위망도 더 좁혀 나가고 있다.

WSJ는 이날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투자 금지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최근 몇 주간 이런 방안을 협의했다. 더 나아가 두 부처는 재무부와 해당 조치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총액 기준 중국 기업 순위**
(단위 : 억 달러) ※5일 종가 기준

| 순위 | 기업 | 시총 | 업종 |
|---|---|---|---|
| 1 | 텐센트 | 7320 | 기술 |
| 2 | 알리바바 | 6500 | 기술 |
| 3 | 구이저우마오타이 | 4090 | 소비재 |
| 4 | 공상은행 | 2610 | 금융 |
| 5 | 메이탄 | 2350 | 기술 |
| 6 | 핑안보험 | 2330 | 금융 |
| 7 | 핀둬둬 | 2300 | 기술 |
| 8 | 우량예이빈 | 1970 | 소비재 |
| 9 | 건설은행 | 1880 | 금융 |
| 10 | 초상은행 | 1700 | 금융 |

※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WSJ)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알리바바 산하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의 모바일 결제 앱 알리페이, 텐센트가 만든 알리페이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 위챗페이 등 8개 중국 앱을 사용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투자 금지는 이들 기업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파괴력이 있다. 텐센트는 중국 1위 시가총액 기업이고 알리바바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양사의 시총은 총 1조3000억 달러(약 1414조 원) 이상이다. 블랙스톤과 뱅가드그룹 등 미국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양사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이 추종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FTSE러셀 등이 만드는 벤치마크 주가지수에도 두 회사 비중은 크다.

시장 혼란이 불 보듯 뻔하지만, 트럼프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계속 과시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일본 도쿄 소재 BNP파리바증권의 나카조라 마나 글로벌 마켓 총괄본부 부회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생채기를 남기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주식 투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기업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왜곡을 유발해 바이든이 이런 강경책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 그러나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쉽게 누그러지면 중국에 대한 저자세가 확실하게 비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中 춘제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비상**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왔다고 자부했던 중국은 다시 감염 확산 조짐이 나타나며 비상이 걸렸다. 수도 베이징과 붙어 있는 허베이성은 전날 확진자가 120명 나왔다. 중국은 최대 명절인 춘제(구정)를 약 5주 앞두고 있어 확산 억제 방안을 고심 중이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 집값상승 주범 된 아마존, 주택공급 2兆 푼다

## 제1·2본사·운영센터 등 3개 지역 대상… 저소득층 위한 주택 건설 발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닷컴이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거액을 투자한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만큼 적극적인 대처로 지역사회의 불만을 줄이려는 것이다.

아마존은 6일(현지시간) 미국 내 자사 주요 고용 허브 3곳에 5년간 20억 달러(약 2조18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수만 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투자 대상은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과 현재 제2의 본사 건설이 한창인 수도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과 운영센터가 있는 테네시주 내슈빌 등 3개 지역이다. 현재 시애틀에는 7만5000명 가량이 근무하며, 알링턴과 내슈빌 인력도 각각 1000명이 넘는다. 앞으로 5년 안에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마존과 같은 IT 대기업 근로자들은 고임금이어서 필연적으로 인근 지역의 임대료와 생활비 급등을 초래한다. 알링턴 지역의 아파트 월평균 임대료는 2010년 1789달러에서 2019년 2262달러로 26% 뛰었다.

아마존이 지난해 초 제2 본사를 뉴욕에 세우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도 임대료 급등과 주택난 등에 대한 불안으로 지역 주민이 크게 반발한 영향이 컸다.

이에 아마존은 지역사회의 불만과 우려를 달래고자 임대료 상승과 주택난 이슈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 한다. 아마존은 "투자 대부분은 낮은 가격의 주택을 유지·보수하거나 신축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소수인종을 위한 주택단체에도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지역사회 개발 책임자인 캐서린 부엘은 "대규모 고용주가 들어서면서 주택시장이 이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아마존의 성장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며 "우리의 입지를 넓혀가면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은 3개 지역에 최소 2만 가구 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들을 유지해 지역 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마존의 움직임은 다른 실리콘밸리 대기업을 따른 것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은 이미 저가 주택 공급에 나서고 있다. 애플도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주택난 해소를 위해 25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버드대 주택연구공동센터의 크리스 허버트 전무이사는 "IT 기업들의 투자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의 주택 부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주택난을 해소하려면 민간 투자는 물론 정책 변경과 더 많은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딜리버리히어로〉

# '배민' 품는 DH, 1.7조 증자 추진

## "배민 인수와 별개… 재무 유연성 확보 차원"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인수를 추진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16억 달러(약 1조7392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는 투자자 가치 제고와 현금 확보 차원에서 944만 주의 신주를 발행해 16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 증자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회사 측이 주식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감안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대변인은 "우아한형제들과의 거래는 기존 자본으로도 충당된다"며 "새로 조달하는 자금은 회사의 재무 유연성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자는 JP모건체이스와 모건스탠리 등이 맡는다.

딜리버리히어로는 2019년 12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8%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 배민을 인수하기 위해 배달 앱 시장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지시했고, 회사 측은 이 조건을 수용했다.

한 남성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회사 앞을 지나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

블룸버그는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을 넓히고 있다"며 "우아한형제들이 소프트뱅크의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쟁사 쿠팡에 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은 향후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며,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창업자는 이 합작회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집행이사를 맡는다. 합작회사는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음식 배달, 공유 주방, 퀵커머스(생필품 등 즉시 배달 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고대영 기자 kodae0@

# 가상화폐 시총 첫 '1조달러' 돌파 비트코인 3만7000달러 뚫었다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088조 원)를 넘어섰다. 가상화폐의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3만7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썼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글로벌 가상화폐 시총은 1조3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1년 간 가상화폐 시총은 5배나 늘었다. 비트코인 시총은 6760억 달러로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1360억 달러의 시총으로 비트코인의 뒤를 이었다. 이어 테더와 리플, 라이트코인이 시총 상위 5위에 자리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4% 상승해 3만7000달러 선도 뚫었다. 이로써 비트코인은 작년 동기 대비 4배 가까이 뛰었다.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시장 점유율은 66%에 이른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14%이며, 올해에만 64% 상승했다. 최근 1년 간 상승폭은 788%에 달한다.

가상화폐의 약진은 기관투자자들의 유입과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 덕분이다. 세계 최대 모바일 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은 지난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펀드를 출시하며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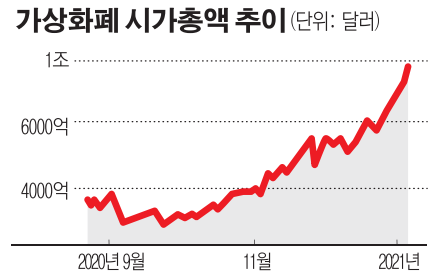
미국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를 일으킨 것도 이날 가상화폐 랠리에 영향을 줬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 재정 확대는 시중의 유동성을 높여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JP모건체이스가 4일 비트코인을 금에 비교하며 "장기적으로 14만6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낙관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다만 JP모건은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평가를 받아 자리를 잡아야 가능한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가격 변동성을 낮춰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2017년의 랠리와 지금의 상승세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여전히 커 거품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강하다. 앞서 지난 4일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7% 가까이 폭락하며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최혜림 기자 rog@

**가상화폐 시가총액 추이** (단위: 달러)



# 단톡방서 은행 시험 정보 공유… 모의 면접도 화상으로

# "MR(한계수입)=MC(한계비용)일 때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 아닌가요? 독점기업이라 헷갈립니다." 은행권 취업준비생 A씨는 이같이 말하며 한 문제의 사진을 은행 취준생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다. 한 취준생은 A씨에게 글로 문제를 풀이해줬고, 또 다른 취준생은 MR과 MC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 설명했다. 해설지보다 자세한 설명에 A씨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다.

#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혹시 스펙은 어떻게 되시나요?" A씨와 같은 단톡방에 있는 B씨는 은행과 일반 사기업을 함께 준비하던 중 한 사기업에 최종 합격했다. B씨는 단톡방에서 이같은 축하를 받고 자신의 학교, 학점, 자격증, 인턴 경력 등을 공개했다. 이 방에 있던 취준생들은 B씨 덕분에 깜깜이인 취업 전쟁에서 지표 하나를 얻게 됐다.

## 코로나發 금융권 취업 준비

### 취준생 10명 중 9명 온라인 활용
### 문제 풀이 등 스터디 그룹 구성
### 코딩테스트·직무 적합도 면접 등
### 은행도 신규 채용 비대면 전환

코로나19로 대면 만남이 어려워지자 최근 취업 시장에는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A씨와 B씨가 있는 단톡방은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취업을 목표로 개설돼 현재 1200여 명이 모였다. 이 방은 정보 전쟁이라고 불리는 취업 전쟁에 맞춰 기초적인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다. 이곳에 있는 취준생들은 서로 스크랩한 금융권 주요 기사를 공유하고 필기 시험 관련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추천하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취업 준비의 비대면화를 가속화 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코로나19 이후 취업 준비 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준생 1070명 중 962명이 온라인만 활용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취준생 10명 중 9명이 랜선 취업 준비에 나선 것이다. 학원 수강, 스터디 그룹 등 오프라인으로 만나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면접 준비도 역시 비대면화 됐다. 과거 카페에서 만나 서로의 면접 태도를 피드백했던 면접 스터디는 찾아보기 힘들다. 연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집합 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카페는 모든 좌석을 치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달부터 5명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면서 취준생들은 더욱 만나기 힘들어졌다. 만남 자체도, 만날 장소도 제한되자 온라인 화상 서비스 줌(ZOOM)이 대면 스터디로 인한 빈틈을 채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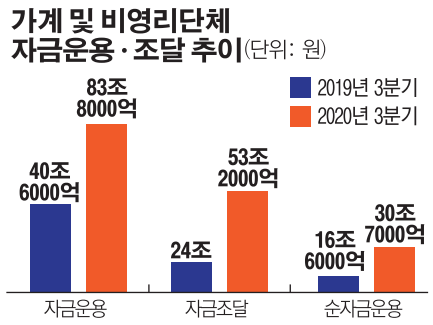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언택트화 된 건 채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8월 은행연합회 등 6대 협회가 주최하는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몇몇 은행은 채용박람회 이후의 과정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지난 하반기 채용에서 KB국민은행이 코딩테스트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신한은행이 직무 적합도 면접을 개별 화상 면접으로 전환한 게 대표적이다.

한 시중은행 채용 담당자는 이번 채용에 대해 "코로나로 모든 이가 힘들었던 한 해"라고 했다. 경기 침체로 채용 규모가 줄어 구직자도 힘들고, 채용 전형별로 코로나19 방역으로 은행도 힘들었다는 뜻에서다. 그는 "글로벌과 디지털을 축으로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 구성원으로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팀워크는 기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인사 담당자 역시 비대면 면접에 대해 "블라인드 면접 환경을 익히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본인만의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 '빚투'·'영끌' 열풍에… 가계 주식투자·금융 부채 '역대 최대'

## 한은, 작년 3분기 자금순환

### 증권 등 운용 규모 23兆로 확대
### 금융기관 차입금 전년比 29兆↑




지난해 3분기 가계부문에서 주식 등에 운용한 자금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었다. 동시에 금융기관차입 규모도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장에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셈이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자금순환 잠정' 자료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운용 규모는 83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40조6000억 원)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 규모가 22조50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된 영향이다.

자금조달 규모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기관 차입 규모는 52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23조4000억 원)대비 29조2000억 원이 늘었다. 이로 인해 자금운용액에서 자금조달액을 차감한 수치인 '순자금운용' 규모는 30조7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규채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가면서 가계부문에서의 주식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기관 차입은 주택, 주식투자, 생계자금 등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가계는 이전소득(대가 없이 지급되는 이익)을 중심으로 소득이 증가했지만, 소비가 위축되면서 순자금조달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비금융법인기업의 지난해 3분기 자금운용액은 금융기관 예치금과 채권운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23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기간 금융기관 차입 등 자금조달액도 38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순자금조달액은 축소됐다. 정 팀장은 "코로나 금융지원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3분기에는 기업의 수익이 높아지면서 순자금조달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일반정부도 자금운용과 자금조달 규모가 모두 늘었지만, 자금조달이 21조3000억 원으로 운용액(30조6000억 원)보다 더 크게 증가해 순자금운용이 8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축소됐다. 국외에서는 자금운용은 감소한 반면 자금조달은 증가해 순자금조달(28조3000억 원)이 확대됐다. 곽진산 기자 jinsan@

##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 사의 표명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이 취임 1년도 안돼 사의를 표명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이날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케이뱅크는 곧바로 은행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직무대행은 정운기 부행장이 맡는다. 이 행장의 당초 임기는 2022년 초까지 2년간이었다.

케이뱅크는 당장 8일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해 차기 행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후보자를 내정하면, 가급적 이달 안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차기 행장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경영 공백이 없도록 곧바로 은행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 오너 3·4세들, 새해 벽두부터 리빌딩 승부수

**발 빠른 '포스트 코로나' 준비**

**SK, 1.6조 들여 美 수소기업 인수**

**LG, 車 이어 빅데이터 분석 투자**

**현대차, 계열사 '사명' 교체 추진**

**과감한 의사 결정으로 미래 대비**

위부터 SK그룹이 투자한 미국 플러그파워의 수소충전기, LG전자의 올레드 TV, 현대차그룹이 그린 미래 모빌리티 구상도. 사진제공 각 사

'살아남기 위해 싹 바꾼다' 연초부터 재계에 리빌딩(Rebuilding) 바람이 불고 있다. 수십 년 된 로고와 사명을 바꾸고, 투자와 인수·합병(M&A)에도 거침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다. 특히 젊은 오너 3~4세들이 본격적으로 기업을 이끌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 "수소 경쟁력 키우자" = 먼저 기업들은 기존 사업 영역을 넘어 새로운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및 M&A에 나서고 있다.

SK는 새해 첫 투자처로 '수소'를 낙점했다. 차세대 에너지이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핵심 영역으로 주목받는 수소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미국 수소 기업인 '플러그파워(Plug Power)'에 15억 달러(약 1조6000억 원)를 베팅했다.

7일 SK㈜와 SK E&S는 8000억 원씩 출자해 플러그 파워의 지분 9.9%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1997년 설립된 플러그파워는 수소 사업 밸류체인 내 차량용 연료전지(PEMFC), 수전해(물에 전력을 공급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핵심 설비인 전해조, 액화수소 플랜트 및 수소 충전소 건설 기술 등 다수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플러그파워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게차와 트럭 등 수소 기반 모빌리티 사업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 아마존, 월마트 등 미국 전체 수소 지게차 공급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전역에 구축된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대형 트럭시장에 진출했으며, 드론·항공기·발전용 등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있다.

SK는 이번 투자로 플러그파워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아시아 수소 시장의 리더십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LG, 美 TV 광고 데이터 분석 기업 인수 = LG 역시 연초부터 기업 인수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LG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알폰소(Alphonso Inc.)'에 약 8000만 달러(약 870억 원)를 투자하고 지분 50% 이상을 확보했다.

최근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며 하드웨어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강화한 데 이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유망 업체를 인수하며 시너지를 꾀하는 것이라 의미가 크다.

이번 인수는 기존 주력 사업에 디지털 전환을 접목해 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분야로 TV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LG전자는 신사업 분야에서 △ZKW △'엘지 마그나 이파워트레인(LG Magna e-Powertrain Co. Ltd)'(가칭) 등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주력 사업 분야에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모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룩소프트(Luxoft)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등 소프트웨어, 서비스·콘텐츠로의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알폰소는 지난 2012년 설립된 TV 광고·콘텐츠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이다. 독자 개발 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을 보유했으며, 북미에서 1500만 가구의 TV 시청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TV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는 한편, 서비스 및 콘텐츠 경쟁력을 차별화하며 중국 업체 등을 필두로 지속해서 심화하는 경쟁 환경 속에서 추가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명·로고 바꾸고, 새 브랜드도 론칭 = 기업 정체성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 작업도 한창이다. 기아자동차가 지난 6일 발표한 브랜드 로고와 회사명 교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새 로고와 슬로건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전략 'Plan S(플랜 에스)'의 일환이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및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2대 미래 사업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담고 있다. 사업 재편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명 역시 기존의 기아자동차(Kia Motors)에서 자동차(Motors)를 뺀 기아(KIA)로 바꾼다. 1990년 기아산업에서 기아차로 사명을 교체한 지 30년 만이다.

현대기아차 다른 계열사들 역시 사명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모비스가 사명 교체를 검토 중인 가운데 현대를 뺀 '모비스'가 물망에 오른다. 포드의 비스테온과 FCA의 모파, 일본 토요타의 덴소 등과 마찬가지로 모기업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SK 또한 그룹 CI인 '행복날개'에 그룹 경영 철학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SV)를 적용하면서 그룹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SK는 '행복날개' 의미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했다. 이를 통해 SK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재정의했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사명을 구축하기 위해 SK텔레콤 등 일부 계열사의 사명 변경도 추진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품에 사용할 브랜드 로고 'Samsung OLED'를 이날 발표했다. 자사 제품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시장에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젊은 오너 3~4세 과감한 승부수 = 재계는 유학파 출신의 젊은 오너들이 이 같은 결단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삼성, 현대차, LG 모두 젊은 오너 3~4세 시대를 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됐다. 같은 달 정의선 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회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정의선 시대를 열었다. 4대 그룹 수장 가운데 가장 젊은 구광모 회장은 취임 4년 차를 맞아 자신만의 색깔을 LG그룹에 입히고 있다. 최태원 회장 역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데다, SK그룹을 새롭게 도약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계 관계자는 "불확실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젊은 감각을 갖춘 오너 3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신사업에 승부수를 걸고 있는 만큼 향후 몇 년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김준형 기자 junior@ 김유진 기자 eugene@·노우리 기자 we1228@

## 기아차 '씨드 왜건 PHEV' 2021 스웨덴 최고의 차

기아차는 씨드 왜건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2021 스웨덴 최고의 차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2018년 중형세단 K5(현지명 옵티마) 왜건 PHEV가 이 상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최종 후보에는 △포르쉐 타이칸 △폴크스바겐 ID.3 △BMW iX3 등 총 10대가 결선에 올라 경쟁했다. 심사위원단 평가를 종합한 결과 작년 12월 30일(현지시각) 기아차의 씨드 왜건 PHEV가 최종 수사의 영예를 안았다.

피터 힘머(Peter Himmer) 기아차 스웨덴판매법인장은 "기아차가 2018년에 이어 다시 한번 PHEV로 최고의 상을 받게 돼 자랑스럽고 기쁘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단은 "씨드 왜건 PHEV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며 다양한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인 면이 돋보였다"라고 심사의 배경을 밝혔다. 기아차 씨드 왜건 PHEV는 작년 1월 현지 출시 이후 현재까지 스웨덴에서만 4000대 이상이 판매됐다. 환경을 중시하는 스웨덴 고객들에게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KAEMS, 제주항공 여객기 정비 계약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6일 제주항공과 B737-800 항공기 6대 정비 계약을 체결하고 티웨이항공과 동일 기종의 추가 수주를 협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또한, 현재 A320 계열 항공기를 다수 보유한 항공사들과 정비지원 관련해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AEMS는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238% 성장했다.

이는 2018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다. KAEMS는 올해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수 부분에서는 기존 주요 사업인 보잉 B737 계열 중정비에서 에어버스 A320 계열 중정비로 외형적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회전익 부분에서 수리온 외 에어버스, 시콜스키 헬기의 정비를 수행할 계획이다. KAEMS는 6일 수리온 3대 정비를 기점으로 올해 약 75대 정비를 맡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완공한 KAEMS의 민간 항공기 행가(정비시설)는 국내 항공정비(MRO) 업체가 보유한 행가 중 최대 규모로 보잉 B737, 에어버스 A320 등 내로우바디 4대까지 동시 정비가 가능하다.

이주혜 기자 winjh@

## 모델솔루션, CES서 1인 모빌리티 공개

**한국앤컴퍼니 계열사로 참가**

**산업용 증강현실 기기 등 전시**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계열사인 모델솔루션이 11~14일(미국 현지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1'에 참가해 솔루션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선보인다.

모델솔루션은 'CES 2021'에서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증강현실(AR) 기술과 개인 이동수단(PM)에 관한 신제품을 공개하며 차별화한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최근 개발한 'CMF Lab(Color, Materials, Finish Laboratory)'의 디자인 역량도 입증할 계획이다.

먼저, AR 분야에서는 산업용 증강현실 디바이스(AR HMD) 디자인과 연구개발에 대한 결과물로 프로토타입 신제품인 코드명 'MS-AR20'을 공개한다. MS-AR20은 사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해 다양한 평가와 착용 테스트를 통해 필수 기능을 갖춰 산업에 특화된 제품으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 이동수단 분야에서는 AR를 접목한 첨단 미래형 프리미엄 전동 킥보드(e-Scooter)의 프로토타입 신제품인 코드명 'MS-PM20'을 선보인다. MS-PM20은 매력적인 디자인과 안전을 강조한 11인치 광폭 에어리스 타이어(Airless Tire)와 함께 기존에 없던 스탠드형 폴딩(Stand-Folding) 기능과 지문 인식, 블랙박스 카메라 등을 적용하고, 다양한 색상을 사용자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1 - 11 호

# 2021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지원 공고

**[본 사업은 R&D 샌드박스 신청대상사업임]**

2021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Ⅰ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ㅇ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 2. 지원분야

ㅇ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
  *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5개 영역, 25대 분야)에 대한 개요는 [첨부 1]을 참고

| 구분 |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수송 | 개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 스마트하고 편리한 생활 | 쾌적하고 스마트한 에너지·환경 |
|---|---|---|---|---|
| 국민 삶의 질 (수요) | ·전기수소자동차<br>·자율주행차<br>·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플랜트<br>·차세대 항공 (드론포함) | · 디지털 헬스케어<br>· 맞춤형 바이오 진단·치료<br>· 스마트 의료기기 | ·스마트 홈<br>·서비스 로봇<br>·웨어러블 디바이스<br>·디스플레이<br>·지능정보 서비스 | ·수소에너지<br>·재생에너지 (태양·풍력 등)<br>·지능형 전력시스템<br>·에너지 효율향상<br>·청정생산<br>·원자력 안전 및 해체 |
| 생산(공급) |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제조<br>첨단 신소재, 지능형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장비, 스마트 산업기계, 디자인융합, 스마트 엔지니어링, 3D 프린팅 | | | |

### 3. 지원유형

| 지원유형 | 세부유형 | 내용 |
|---|---|---|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일반 트랙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
| | 이어달리기 트랙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br>* 중기부·과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 종료과제 주관기관이 신청<br>*(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TIPS과제(R&D),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과제, (과기부) SW고성장클럽 200사업 |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해외 연구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1개 이상 기관과의 컨소시엄 |

### 4. 공고예산 및 지원내용

| 구분 | 지원유형 | 세부유형 | 지원내용 |
|---|---|---|---|
| 공고예산 | 166억원 내외 | | |
| 지원규모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일반 트랙 | 135억원 내외(38개 내외 과제) |
| | | 이어달리기 트랙 | - 연간 5억원 이내(주관기관 60%이상 배정) |
|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 31억원 내외(7개 내외 과제)<br>- 연간 6억원 이내(주관기관 60%이상 배정) |
| 지원기간 | 4년 이내 | | |

* 1차년도 개발기간은 '21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2~4차년도는 해당년도 1월~12월임
* 공고예산 및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위원회(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평 가 위 원 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Ⅱ 신청자격, 세부지원내용 등

### 1.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 1-1. 주관기관 신청자격

□ **일반 트랙, 이어달리기 트랙 공통적용 사항**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ATC사업 또는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동사업의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 **이어달리기 트랙 적용 사항**
ㅇ 중기부·과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 종료과제 주관기관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지원사업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TIPS과제(R&D),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강소기업과제, (과기부) SW고성장클럽 200사업
 - 최종평가가 완료되고, 최종평가결과 '미완료', '불성실' 등 실패에 준하는 과제는 제외(신청시 일반 트랙으로 전환)
 * 신청시 해당사업명, 주관기관 등이 기재된 최종평가결과 증빙서류 제출(최종평가종합의견서)

#### 1-2. 주관기관 신청요건

 * 일반 트랙, 이어달리기 트랙에 모두 적용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3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 | 신청요건 | 세부내용 |
|---|---|---|
| 1 | 연구인력 8인~30인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
| 2 | R&D 집약도* 2% 이상 (직전 1개년도('19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8~'19년 결산) 평균) |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 3 |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10차 표준산업분류, [첨부 2] 참고)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1%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신청서식 중 'R&D집약도 산정기준 및 작성서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1.2.8.)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6.2.8일 이전이어야 함

#### 1-3. 지원규모

ㅇ 최대 4년,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과제이며,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해당연도 총 정부출연금의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1-4. 추진방식

ㅇ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형태는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산-산-연, 산-산-학, 산-산-학-연 등 가능
 - 컨소시엄 참여기관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참여 가능

#### 1-5.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업의 자생적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일부를 지원
ㅇ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기관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만 가능(연구관리직원은 제외)
ㅇ 창의활동비 관련 지원
 -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기술교류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 내 창의활동비(연간 500만원 이하)로 산정할 수 있음

### 2.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 2-1. 주관기관 신청자격

 * 다음의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 기준)
 ②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월드클래스 300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기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주관기관으로 신청 불가

#### 2-2. 주관기관 신청요건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요건 : 4가지 동시 만족 시 신청가능]**

| | 신청요건 | 세부내용 |
|---|---|---|
| 1 | 연구인력 8인~30인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만 인정(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현황 확인(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
| 2 | R&D 집약도* 4% 이상 (직전 1개년도('19년 결산) 또는 직전 2개년도 ('18~'19년 결산) 평균) | 당해연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연구개발비 비중으로 산출하며, 재무제표 상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R&D 투자 비용으로 인정함(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 3 | 5년 이상 R&D 활동실적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기준 만 5년이 초과한 기업부설연구소 |
| 4 |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서(MOU) 제출 | 사업신청 시 해외기관/기업(산·학·연)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업무협약서(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성과 공유계획 등을 포함한 MOU)를 반드시 제시 |

 * R&D 집약도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10차 표준산업분류, [첨부 2] 참고)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 'J(정보통신업)',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시 R&D 집약도는 2% 이상으로 함. 단, 해당분류에 대해서는 R&D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통해 분류함
 ** 자세한 R&D집약도 산정방식은 신청서식 중 'R&D집약도 산정기준 및 작성서식'을 참고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날인된 날(신고일 아님)이며, 접수마감일(2021.2.8.)까지 만 5년을 초과하여야 하므로 인정일은 2016.2.8일 이전이어야 함

#### 2-3. 지원규모

ㅇ 최대 4년, 연간 6억원 이내 지원
 - 산·학·연 협력으로 진행되는 과제이며,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해당연도 총 정부출연금의 60%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2-4. 추진방식

ㅇ 국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1개 이상의 해외 연구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컨소시엄*을 지원
 *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형태는 산-산, 산-학, 산-연, 산-학-연, 산-산-연, 산-산-학, 산-산-학-연 등 가능
 - 참여기관으로 해외 연구기관은 필수이며, 별도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 센터 등 참여 가능
 * 국내(주관기관) + 해외(참여기관, 필수) + 국내(참여기관, 선택)
 - 사업 신청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상호간 업무협약서*를 반드시 제출
 * 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성과 공유계획 등 포함한 MOU
 - 글로벌협업연구센터(Collaboration-center) : 연구기간 동안 연구주체들이 상시적으로 동일공간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 회의실 등을 갖춘 협업형 공간(국내) 구축
ㅇ 해외 연구기관(산학연) 매칭지원 기관([첨부 3] 참고)

| 지원기관 | 내용 | 문의처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GT(Global Tech) online을 통한 원스톱 플랫폼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매칭지원 (gtonline.or.kr) | 1811-9595<br>EEN(유럽 기술협력 네트워크), GCC(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K-TAG(해외 한인공학자) 등 해외 기술협력 종합 상담 |
| 한국이스라엘산업 연구개발재단 | 이스라엘 연구기관과 매칭지원 | 02-6009-8245 |
| ATC 협회 | 특허검색솔루션 활용을 통한 해외협력 R&D 파트너 매칭지원 | 02-6009-3550, 3551 |
| 프라운호퍼 코리아 |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와 매칭지원 (www.fraunhofer.kr) | 02-420-3027 |
| KEIT 해외사무소 | KEIT 해외사무소를 통한 미국 및 유럽 연구기관 매칭지원 | (미국) 김병재 소장 rarmy78@keit.re.kr<br>(유럽) 전준표 소장 augtto@keit.re.kr |

 * 상기 매칭지원 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하거나 주관기관 자력으로 컨소시엄 구성하여도 됨

#### 2-5.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술개발비 및 고급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연구인력 유치(인건비 및 체류비), 글로벌협업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일부를 지원

| 글로벌협업연구센터(Collaboration-center) 개념 및 운영 방식 |
|---|
| ㅇ **(글로벌협업연구센터 구축)** 해외 우수연구그룹과의 협력성과 창출을 통한 국내 기업연구소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도록 밀착형 협력연구 및 교류 등을 위한 연구거점을 국내 주관기관에 구축<br>ㅇ **(해외 우수연구인력 유치)** 해외 우수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자의 인건비와 체류비 활용을 의무화(연간 2개월 내외)<br>*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 연구자 체류가 불가능한 경우 전담기관에 관련비용 변경사용에 대해 사전통보할 것<br>- 선정기업과 국내외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 가능한 연구센터(연구시설·장비), 원격회의실 등 협업공간과 함께 지식자산 관리·공유시스템 조성<br>- 공동연구 과정에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R&D 혁신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연구센터의 4대 역량(연구역량, 협력네트워크, 연구성과 및 선진 R&D시스템) 업그레이드<br>-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약(공동연구 범위, 연구비 대응규모, 공동 IP Pool 구축 및 IP 소유권한, 수익공유형 Business Model 등 포함)이 필수 |

ㅇ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기관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만 가능(연구관리직원은 제외)
ㅇ 창의활동비 관련 지원
 -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하여 관련 협회 및 단체의 기술교류회 참여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 내 창의활동비(연간 500만원 이하)로 산정할 수 있음

### 3. 참여기관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ㅇ 국내 산·학·연 中 1개 이상의 참여기관 매칭 필수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과 공동연구가 필수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ㅇ 해외 산·학·연(글로벌 컨소시엄) 中 1개 이상의 참여기관 매칭 필수
 - 해외 참여기관의 경우 기관의 유형 및 지원 요건 등에 제한이 없음
 - 국내 참여기관은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출 것

□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ㅇ 참여기관이 기업(중소·중견·대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 4. 통합패키지 및 연계지원

#### 4-1.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ㅇ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선정·수행 시 아래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지원기관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담당자 연락처 |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ISTA) | 특허기술동향조사 (3개월 소요) |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과제에 해당<br>- 특허 장벽 대응 및 회피 방안 제공<br>- 특허 관점 R&D 방향성 제시 | 02-3475-1363 |
| | IP R&D (9개월 소요) | -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과제에 해당<br>- R&D 맞춤형 IP 전략수립 | 02-3287-4238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OITA) |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 이공계 연구개발 인력의 채용지원 (www.rndjob.or.kr) | 02-3460-9125 |

#### 4-2. 연계지원사업

| 지원기관 |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담당자 연락처 |
|---|---|---|---|
| ATC협회 | 기술교류기반 네트워크 강화사업 | - 선정기업간 성과 및 기술교류회<br>- R&D 연구지원전문가 실무교육 지원 | 02-6009-3550, 3551 |

 * 동사업 수행시 상기 통합패키지 및 연계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희망시 ATC협회를 통해 통합신청 가능 (ATC협회 담당자 : 이선미 과장, 02-6009-3550, 3551, smlee@atca.or.kr)

## Ⅲ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수행(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수행(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사전지원제외 |
|---|
| 1. 기업의 부도<br>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br>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br>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br>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br>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br>※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br>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br>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주관기관 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
| 중견기업 | 5 | 4 |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기존 ATC 사업을 수행한 주관기관이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ㅇ 동 사업의 지원유형 중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과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에 주관기관으로 동시 신청한 경우* 또는 같은 유형에 2개 이상 주관기관으로 동시 신청한 경우**
 * 두 개의 지원유형에 동시 신청 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의 신청자격은 상실됨
 ** 동일 유형에 동시 신청 시 과제번호가 가장 빠른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신청자격은 상실됨
ㅇ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 R&D에 기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동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 및 연구소 업력,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R&D 집약도 등

## Ⅳ 사업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조건

### 1. 과제 사업비 구성

ㅇ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 2.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ㅇ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1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적용

| 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
|---|---|---|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
| 수요기업[5]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업임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 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ㅇ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21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 수요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중견·중소기업이 'Ⅵ.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ㅇ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 Ⅴ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1. 기술료 징수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징수

### 2.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의 기술료**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
| 대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0% | 수익금액×기술기여도×20%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수익금액×기술기여도×10% | 정부출연금의 20% |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수익금액×기술기여도×5% | 정부출연금의 10%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ㅇ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3.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ㅇ (신청대상) 산업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년)
ㅇ (신청자격)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ㅇ (신청방법)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ㅇ 신청 및 처리절차

| 감면 신청 (기술료 확정통보일 30일 이내) | → |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 | 기술실시계약 (납부유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 | 기술료 납부 |
|---|---|---|---|---|---|---|
| 실시기업→전담기관 | | | | 실시기업→전담기관 | | 실시기업 |

ㅇ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율 적용
ㅇ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 (이행 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해당인력 연봉의 50%를 감면하고 실시계약 체결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 Ⅵ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 인건비 비중* | 연차별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5%로 책정 |
|---|---|

 *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 비중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ㅇ 코로나 특별지침에 따라, 2021년에 한해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사업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의 2배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에만 적용)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액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사업비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
|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br>-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br>◇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br>-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br>◇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br>◇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1]을 참조 |

ㅇ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 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ㅇ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 구분 | 1차년도 해당연도 | 1차년도 누적 | 2차년도 해당연도 | 2차년도 누적 | 3차년도 해당연도 | 3차년도 누적 |
|---|---|---|---|---|---|---|
| 정부출연금 | 3억 | 3억 | 3억 | 6억 | 4억 | 10억 |
| 의무채용 | 1명 | 1명 | 1명 | 2명 | 0명 | 2명 |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기업당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인력으로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수행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집행액이 직접비 집행액의 20%p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2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Ⅶ 평가절차 및 기준

### 1. 평가절차

| 1. 사전검토 | 2. 서면평가 | 3.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 4. 최종선정 |
|---|---|---|---|
| 신청요건 충족 여부와 정부지원 부적격 기업 선별 |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 R&D 사업계획서 | 기업부설연구소 역량 및 성장 가능성 현장실사(현장실사) | |
| 평가위원회 구성 → |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선정 * 최종선정 과제의 2배수 내외 → | 발표평가(100점) → | 최종선정 (100점+가감점) |
| | |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55%) + R&D 사업계획서(45%) | ATC+ 인정서 부여 |

□ **사전검토(신청자격 등)**
ㅇ 접수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ㅇ (필수요건) 기업부설연구소 필수요건(신청자격), R&D 집약도 등 신청요건 검토
ㅇ (정부지원 적격 여부 확인) 공고내용의 부합성, 중복성,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정부지원 부적격 기업 선별

□ **서면평가**
ㅇ 기업연구소 성장전략서와 R&D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시행하되,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여부를 결정하되, 서면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발표평가대상과제를 선정(최종선정 과제의 2배수 내외)
 * 상황에 따라 발표평가대상과제수는 변경가능하며, 서면평가결과 통보시 발표평가대상 여부만을 안내

□ **현장실사**
ㅇ 서면검토를 통해 발표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주관기관(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현장실사 추진
ㅇ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사를 수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발표평가**
ㅇ 발표평가 시 현장실사 결과는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R&D 사업계획서와 함께 평가참고자료로 활용
 * 현장실사에 응하지 않은 과제는 발표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100점) 및 R&D 사업계획서(100점)를 평가 후, 성장전략서와 R&D 사업계획을 각각 55%와 45%의 비율로 반영하여 100점으로 환산

### 2. 평가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1.1월) →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2월) →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2~3월) → 현장실사 ('21.3월) → 발표평가 ('21.4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1.4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21.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21.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3. 평가기준

□ **현장실사 주요 검토항목**

| 검토항목 | | 세부항목 |
|---|---|---|
| 대표이사/ CTO(연구소장) | R&D 투자 | 연구소 지정이후 R&D 투자 경험 |
| | R&D 활동 | 연구소 지정이후 R&D 활동 수행 경험 |
|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수준 | R&D 기획 | 기술혁신에 대한 5개년 중장기전략(로드맵)의 수립 수준 |
| | | 핵심기술확보를 위한 시험기자재, 장비 등 확보 수준 |
| | | R&D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 확보 수준 |
| | 프로세스 관리 | 과제 관리 체계 구축 수준 제안-선정-평가-종료 |
| | | 프로젝트 정보 DB 구축 여부 |
| | | 프로젝트 진도관리 시스템 구축 수준 |
| | | 개방형 연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수준(외부 협력기관 /인력 DB 구축) |
| | 연구성과 관리 | IP 전담조직을 통한 IP 보호 준비 수준 |
| | | 기술축적 및 활용(공유)시스템 준비 수준(연구노트 등) |
| | | 연구개발활동 보상체계 구축 수준(인센티브 제도 등) |

□ **평가항목(서면평가, 발표평가)**
 * 서면평가시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상대평가를 통해 발표평가대상과제만 선정(점수 미산출)

|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평가 | |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연구소 연혁(20점) | - 연구소 성장과정<br>- 연구소현재 역량(연구소내 조직구성,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기술적/ 경제적 성과) |
| 연구소 성장계획(60점) | - 연구개발계획(로드맵)<br>- 인력확보 방안<br>- 투자계획(재원조달방안)<br>- 산학연 개방협력 방안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경우 해외기관과의 협력 및 글로벌협업연구센터 운영 방안 포함) |
| 연구소와 기업의 성장 방향 및 R&D 계획 부합성(20점) | - 연구소와 기업의 성장 방향 부합성<br>- 연구소 성장방향과 R&D 계획 부합성 |

| R&D 사업계획서 평가 | |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기술개발역량(15점) | -참여연구진의 전문성<br>-관련분야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
| 협력대상 선정의 적절성(15점) | -협력대상기관의 전문성(해당 분야 선도 그룹)<br>-추진주체별 기술개발 역할분담<br>-성과물 귀속(공유) 방안 마련 |
| 기술개발계획(40점) | -제안기술과 지원분야의 부합성<br>-개발목표 및 내용구체성(기술개발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br>-기술확보 전략의 적절성 |
| 성과활용계획(20점) | -사업화계획<br>-고용창출 효과<br>-지역/산업내 파급효과 |
| 사업비 적정성(10점) | -인건비 및 고급인력 인센티브 계상<br>-R&D 시스템 구축비 계상 |

※ 상기 현장실사 검토항목, 평가항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지원대상과제 선정

ㅇ 발표평가대상과제 중에서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우대 및 감점을 반영
ㅇ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평가, ②R&D 사업계획서 평가, ③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5. 평가 우대 및 감점 기준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소재, 부품, 장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관련 과제를 신청한 경우(2점)
 * 상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제조공정 혁신 등 산업지능화분야
 ** SoC, 센서, 아날로그
 ***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 R&D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가점 관련 분야 여부를 판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과기부 '우수기술연구소'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가 합동으로 마련 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추진과제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한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2점)
 * 1000마일리지 당 가점 1점으로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더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가점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ㅇ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Ⅷ R&D 샌드박스

### 1. 신청요건

ㅇ 최근 5년간 최종평가 결과, '우수'('혁신성과', 조기종료(우수, 혁신성과)포함)를 받은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ㅇ 최근 5년간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ㅇ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과제로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과제는 외국기관이 당연 참여하므로 신청요건에서 제외)

### 2. 지원내용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 전담기관 승인절차 없이 최종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가능
 -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을 미적용
 - R&D 샌드박스 대상 수행기관이 사용한 사업비의 정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
 - 영리기관에 한해 간접비는 연구 목적에 맞게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 건당 단가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 참여) 모두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3. 신청방법

ㅇ 신규과제 신청정보에 'R&D 샌드박스 신청' 항목을 선택
ㅇ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시 'R&D 샌드박스 서류제출 안내'에 통보된 기간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
 * 제출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신청포기로 간주함
ㅇ 주관·참여기관별 재무제표 등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기한은 선정결과 통보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

### 4. 기타사항

ㅇ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4]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참고

## Ⅸ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Ⅹ 신청요령 및 제출 서류 사항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구분 | 기간 |
|---|---|
| 공고 기간 | ㅇ 공고기간 : '21.1.8.(금) ~ 2.8.(월)까지(32일) |
| 신청서 및 양식교부 | ㅇ 양식교부 : '21.1.13.(수) ~<br>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 접수 기간 |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1.1.25.(월) ~ 2.8.(월) 18:00까지<br>ㅇ 온라인 접수마감 : '21.2.8.(월) 18:00까지 |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서 접수시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속하여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수기로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으로 문의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3:59 까지 제출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나,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 시스템이 폐쇄되므로 그 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제출 서류 사항**

| 서 류 명 |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
|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 | 1부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기업부설연구소 성장전략서 | | 1부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온라인 업로드(hwp) |
| 사업계획서 | PART Ⅰ | 1부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 | PART Ⅱ | 1부 | | 온라인 업로드(hwp) |
| 사업자등록증 | | 각1부 |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 ㅇ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br>-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각1부 |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 ㅇ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br>-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가능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각1부 |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 | 1부 |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및 연구인력현황 | | 각1부 |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각1부 |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 R&D집약도 확인서 (산정기준 및 작성서식) | | 1부 | 주관기관만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 | 1부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ㅇ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br>-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br>* 여성연구원 우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필수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1부 | 해당시 제출 (주관+참여기관 모두)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1부 |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제출) | ㅇ 온라인 업로드<br>-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br>*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br>-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br>ㅇ R&D 집약도는 자격조건에 따라 '19년 또는 '18~'19년 해당 서류 제출<br>ㅇ 경상연구개발비에 산정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R&D 투자액으로 산정시<br>- KOITA 발급 기업부설연구소 인력현황<br>- 연구원의 해당연도 지급조서(급여증빙) |
| 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서 (MOU) | | 1부 | 해당시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중기지원사업 최종평가결과 증빙서류 | | 1부 | 해당시 제출 | ㅇ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br>-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내 이어달리기 트랙에 신청한 주관기관만 해당<br>* 공고문 'Ⅱ. 신청자격, 세부지원내용 등, 1.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1-1. 주관기관 신청자격' 참고 |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Ⅺ 기타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원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를 불인정 함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주관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수행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Ⅻ 문의처 등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접수 문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과제관련 상세 문의**
ㅇ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이수갑 수석, 이호준 선임 (053-718-8340, 8345, 8337, 8362, sklee@keit.re.kr, hjlee@keit.re.kr)

산업통상자원부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 "경제 낙관 말아야…글로벌 산업 변화 뒤처질까 걱정"

### 경제계 '비대면' 신년인사회
### 박용만 회장, 역동성 회복 강조
### "산업 신진대사 높일 법안 처리"
### 정세균 총리 "함께 어려움 극복"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용만(오른쪽)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최초로 비대면으로 열린 2021년 신축년(辛丑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정·관·재계 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최대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7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4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정·관계, 재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 인사 600명은 화상 연결을 통해 자리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 경제회복 기대감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늘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과제로 중장기적 전략 마련, 역동성 회복 총력, 청년 기회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박 회장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더욱 빨라진 글로벌 산업 변화 속에서 우리만 감당 못 할 수준까지 뒤처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라고 우려하며 "국회에서도 여러 사정은 있겠지만, 산업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올 한해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절전지훈'(折箭之訓·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의 자세로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자고 격려했다. 정 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반등 △기업 규제 혁파 △혁신을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더불어 잘사는 포용경제 구축 등 네 가지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말 이후 화상 참석자들의 덕담도 이어졌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신축년 새해를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기회복과 반등, 도약을 위해 기업이 디딤돌이라면 정부가 버팀목 되겠다. 기업이 버팀목이라면 정부가 디딤돌을 제공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경제계 대표로 "새해는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밝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정부와 기업이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덕담을 전했다.

노동계 대표로 나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2021년을 위해서는 노사정 신뢰, 공동 실천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자성어 '운외창천(雲外蒼天)'을 언급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구름은 곧 걷힌다. 신축년 한해 실물경제가 푸른 하늘 속에서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제계에선 이인용 사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SK 장동현 대표이사, LG 이방수 사장, 롯데지주 이동우 대표이사, LS엠트론 구자은 회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 등 주요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또 중국에서는 중국삼성, 북경현대차, LG화학, 두산중국, CJ 차이나 등 주요 진출기업과 한국상의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네오 QLED' 공개한 삼성 미니 LED TV 판 키운다

### 기존 소자 대비 40분의 1 크기
### 화면 밝기 4096단계 조정 가능
### LG·소니·하이센스도 제품 출시

삼성전자가 관심을 모으던 미니LED TV '네오(NEO) QLED TV'를 전격 공개했다. 삼성은 이 제품을 QLED TV 라인업 상위군에 배치하며, 내년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6일(미국 현지시간) '삼성 퍼스트 룩 2021(Samsung First Look 2021)'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올해 신제품 및 비전을 발표했다.

네오 QLED는 '퀀텀 미니(Quantum Mini) LED' 적용으로, 기존에 백라이트로 쓰이던 LED 소자 대비 40분의 1 크기를 구현해 더 많은 소자를 배치했다. 마이크로 레이어(Micro Layer)'를 LED 소자에 입혀 소자의 크기는 줄이면서도 더 정교하게 빛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퀀텀 매트릭스(Quantum Matrix) 테크놀로지'도 특징이다. 백라이트로 사용되는 퀀텀 미니 LED의 밝기를 12비트(4096단계)까지 세밀하게 조정해 준다. 또 '네오 퀀텀 프로세서(Neo Quantum Processor)'는 16개의 신경망으로 구성된 학습형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새롭게 적용했다. 입력되는 영상의 화질에 관계없이 8K와 4K 해상도를 각각 최고 수준으로 구현해 준다. 이 밖에 'PC on TV' 기능을 통해 업무용 PC와 TV를 쉽게 연결해 집안에서도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원활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인 홈오피스를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오 QLED 신제품은 8K와 4K로 출시되며, 1분기부터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미니LED TV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LG전자 역시 지난달 'LG QNED 미니 LED TV'를 공개하며 미니LED TV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소니 TCL 하이센스 샤오미 등도 공격적으로 미니 LED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현대에너지솔루션, 방음터널용 양면 태양광모듈 개발

현대중공업그룹의 태양광부문 계열사인 현대에너지솔루션은 7일 세계 최초로 방음터널용 양면(兩面)태양광 솔루션을 개발, 상용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방음터널용 양면태양광 솔루션은 기존 단면형 대비 발전효율을 30% 이상 향상했으며, 태양광모듈이 발전뿐 아니라 방음 역할도 하는 일체형으로 제작돼 설치비용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와 함께 발전효율이 30% 향상된 방음벽용 양면태양광 솔루션도 개발했다.

도로 위의 방음터널과 방음벽은 주변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태양광 발전 공간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 방음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 도로 약 11만km(국토교통부 집계) 중 방음터널과 방음벽 설치가 쉬운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약 1만9000km에 이 솔루션을 적용할 경우, 일반가정 300만 가구에 전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11G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주혜 기자 winjh@

# 카카오게임즈 야심작 '엘리온'… 기대 이하 성적 왜?

### 낯선 '패키지 요금제' 이용 저조
### 코로나에 PC방 영업제한 '악재'
### PC방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
### "마니아층 중심 진성 유저 많고 결제·재방문율 높아 롱런할 것"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엘리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PC방 영업시간이 줄었고, 'Buy to Play(패키지 이용권을 구매해야 플레이할 수 있는 방식)'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집에서 접속하는 수치는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표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나온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이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엘리온'이 출시 한 달째를 맞아 순조롭게 서비스하고 있다. 엘리온은 핵앤슬래시와 논타게팅 방식을 결합한 신작으로 스킬 자유도와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엘리온은 출시 초반 접속 폭주가 발생할 정도로 유저들이 동시에 몰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출시 당일에는 대기 시간이 5시간에 달하기도 했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오픈 2시간 만에 서버를 늘리며 이용자들을 분산했고, 이후에는 서버를 여유있게 구축해 쾌적한 게임 플레이를 위한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용자들 역시 게임 플레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재방문율은 85%에 달하고 신규이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PC방 게임 순위에서 엘리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PC방 게임 전문 리서치 서비스 '게임트릭스'와 '더로그'의 순위에 따르면 엘리온은 6일 기준 게임 순위 10위권 내에서 밀려나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이 출시된 이후 초반에는 상위권에 자리 잡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엘리온은 출시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낯선 이용 시스템 때문으로 분석한다. 엘리온은 국내 PC MMORPG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패키지를 구매해야 플레이할 수 있는 'Buy to Play' 방식을 적용했다. 지금까지 PC MMORPG 장르의 게임은 부분 유료화 방식을 도입하며 결제 없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엘리온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기본 결제를 해야 하는 만큼 출시 초반 이용자들의 반응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PC방 영업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엘리온은 PC방에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지만 한정된 시간만 PC방을 이용할 수 있어 새로운 게임에 대한 유입이 적다는 설명이다.

이에 카카오게임즈는 엘리온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게임과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Buy to Play' 방식이 접속 점유율보다는 추후 매출액에서 영향을 발휘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엘리온의 대표 전쟁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진영전'이 업데이트돼 오는 8일 첫 격돌을 벌인다. 진영전은 엘리온의 두 진영인 벌핀과 온타리의 이용자가 300명씩 3개 전장, 총 900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전쟁 콘텐츠다. 또 조만간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도 앞두고 있어 유저들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용자 트래픽이 Free to Play(이용권 구매 없이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방식)보다 불리하지만 엘리온을 즐기는 유저들은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한 진성 유저"라며 "엘리온의 결제율은 이용자 100%가 될 정도로 구매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진성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결제율, 재방문율이 높아 향후 롱런 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준 기자 tiatio@

# KT 주도 'AI 원팀' 첫 성과… 혁신기술 4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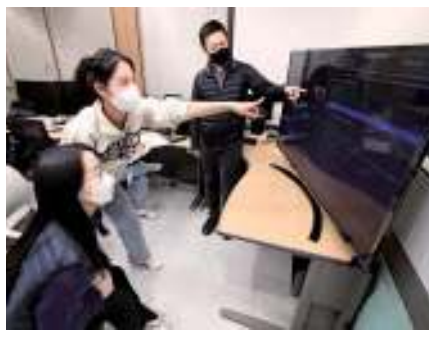
### '딥러닝 음성합성' 기존보다 4분의 1 비용에 속도 10배 빨라
### 무빙 픽처·로봇고장 진단 기술도… 7개 프로젝트 추가 추진

KT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뭉친 'AI 원팀'이 10개월 여 만에 딥러닝 음성합성 등을 포함한 첫 공동 연구개발(R&D) 성과를 공개했다.

7일 KT는 'AI 원팀'의 공동 R&D 첫 성과로 4종의 AI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I 원팀은 KT가 주축이 돼 현대중공업그룹, LG전자, LG U+, 한국투자증권, 동원그룹, KAIST, 한양대, ETRI가 참여해 지난해 출범했다.

개발된 4개 기술은 △딥러닝 음성합성(P-TTS) △E2E 음성 인식 △무빙 픽처(Moving Picture)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고장 진단 기술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4개 연구 성과 중 3개는 KT 사업의 핵심 기술로 활용하고, 1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산업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딥러닝 음성합성(P-TTS, Personalized-Text To Speech)' 기술은 KT와 KAIST 김회린 교수가 협력해 개발했다. 기존 대비 비용을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속도는 10배가량 높인 것이 특징이다. KT는 올해 1분기 중으로 이 기술을 상용화해 AI 컨택센터(AICC), 차세대 기가지니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원팀' 연구원들이 서울 서초구 KT융합기술원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E2E(End-to-End) 음성 인식' 기술은 KT가 한양대 장준혁 교수와 함께했다. 음성 인식 분야의 최신 트렌드인 이 기술은 인식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 적은 양의 학습데이터로 도메인 확장이 가능해 활용성이 크다. 사양 증강(Spec Augmentation), 데이터 증강(Data Augmentation) 등 최신 학습기술을 적용해 기존 하이브리드 방식에 비해 단어 오류율(WER)을 7% 이상 향상시켰다.

'무빙 픽처(Moving Picture)' 솔루션은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하는 AI 기술이다. KT와 한양대 김태현 교수가 함께 연구했다. 이미지에 모션 효과를 적용해 영상으로 바꿔준다. 영상 분할, 객체 검출, 모션 추정, 초해상도 이미지 복원(인페인팅)과 같은 최신 AI 기술을 적용했다. KT는 이 무빙 픽처 솔루션을 IPTV를 비롯해 포스터, 웹툰, 애니메이티드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로봇 고장 진단' 기술은 현대중공업그룹이 한양대 장준혁 교수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AI가 산업용 로봇의 고장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로 진동 신호에 음성처리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 핵심 구동부품인 감속기의 이상을 탐지할 수 있다.

AI 원팀은 출범 뒤 40여 명의 국내 AI 전문가들로 'AI 구루(Guru) 그룹'을 구성했다. 그 뒤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이라는 회의체를 통해 산업현장의 과제를 논의해 왔다. 현재까지 70여 차례 열린 이 '라운드테이블'에선 총 30여개의 아이템이 다뤄졌으며, 11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도출했다.

올해 AI 원팀은 이번에 공개한 4개 프로젝트 외에도 AI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7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추진해 AI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티빙-JTBC스튜디오 '맞손' "대한민국 대표 OTT 되겠다"

### "3년간 콘텐츠 4000억 투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JTBC스튜디오가 본격 가세한다. 티빙은 향후 3년 간 40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7일 CJ ENM은 "JTBC스튜디오가 ㈜티빙에 합류키로 확정했다"며 "양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결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OTT 서비스로 성장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CJ ENM과 JTBC스튜디오는 2019년 9월 합작 OTT법인 출범을 위한 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티빙은 합작법인 출범에 앞서 지난 해 10월 1일 CJ ENM으로부터 분할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CJ ENM과 JTBC스튜디오는 양사의 콘텐츠 역량을 티빙으로 결집해 대한민국 디지털 미디어 유통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한 해 tvN의 '사랑의 불시착'과 '슬기로운 의사생활', JTBC의 '부부의 세계'와 '이태원 클라쓰' 등이 드라마 화제작으로 평가 받으며 양사의 콘텐츠 경쟁력은 수 년간 검증됐다.

티빙은 향후 3년간 40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자해 드라마, 예능을 중심으로 대형 IP 및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숏폼, 미드폼 콘텐츠들도 준비 중이다.

티빙 관계자는 "기존 양사가 보유한 IP를 기반으로 한 콜라보레이션 형태, 스핀오프 형태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tvN, JTBC, JTBC스튜디오, 스튜디오드래곤 등 CJ ENM과 JTBC 양사의 스타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고퀄리티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기획 중"이라며 "이들 콘텐츠들은 올해 초부터 티빙에 순차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을 티빙 대표는 "두 회사의 역량을 한데 모아 티빙을 2023년까지 유료 가입자 500만 이상의 대한민국 대표 OTT 플랫폼으로 육성시키겠다"며 "과감한 투자로 프리미엄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고 개인별 맞춤 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더욱 쓰기 쉽고 편리한 서비스로 티빙을 지속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정부, AI·SW 분야 인재 양성에 2626억 투입

### 작년보다 300억 늘려… "2025년까지 디지털 인재 10만 양성"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분야 인재양성에 지난해보다 약 300억 원을 증액한 262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자하는 'AI·SW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계획'을 지난해 마련하고 실행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이러한 계획 이행에 본격 추진하면서 기존 혁신교육 인프라를 추가 선정하는 한편, 새로운 인재양성 인프라도 구축한다.

우선 인공지능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을 올해 2개교 추가 선정해 총 10개교로 확대한다. SW 분야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우수연구실을 지원하는 SW스타랩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6개 연구실을 추가 선정해 총 42개를 지원한다.

대학 SW 교육 혁신을 주도해온 SW 중심대학은 9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일부는 정원 1만 명 이하 중소규모 대학에 할당할 계획이다. 2년 비정규 교육과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총 5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 교육공간을 확충한다. 또 대학-기업-연구소 등의 개방형 협동 연구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인공지능 교육·연구허브'를 신규로 구축해 대규모 첨단 인공지능 연구와 연구개발(R&D) 중심의 최고급 인재양성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에 지역산업과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AI·SW 교육도 더욱 확대한다. 지역 인공지능 교육거점인 ICT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지난해 추경으로 수도권 1개 거점에서 전국 5대 거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 5대 거점의 전문강사 풀을 통합해 강사를 공동으로 충원하고, 운영기관 협의체를 발족해 우수성과를 공유한다. 지난해 신설한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 사업은 6대 분야에서 올해 12대 분야로 확대해 지원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 카카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에 10억 손배 승소

카카오페이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해 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무단으로 업로드해 지식재산(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인한 웹툰 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 19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페이지는 웹툰과 웹소설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업계 리더십을 지켜왔다. 또 창작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어른아이닷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카카오페이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결과다.

카카오페이지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 함께 협업하여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법 웹툰 유통을 감시 및 처리하는 전문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통해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 이용자 유입 감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이동식 주택〉

# 골드바에 집까지… 편의점 설 선물 '품격' 업그레이드

### GS25, 150만원 '우월한우' 판매
### 이마트24 골드바·미니스톱 골프채
### CU, 1595만원 '이동식 주택'까지
### 백화점 못지않은 프리미엄 구성

편의점업계가 백화점 못지 않은 프리미엄급 구성으로 설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한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와인부터 편의점에서 보기 힘든 골드바까지 이색적인 설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GS리테일은 신축년을 맞아 '소(牛)플렉스' 콘셉트로 기획한 설 선물세트 '우월한우한마리세트', '황금소코인' 등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최상급 한우의 풍미를 붙돋아줄 송로버섯 소금, 화이트 트러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 명품 향신료 4종까지 포함된 우월한우한마리세트 가격은 150만 원에 이른다.

소 캐릭터와 복 주머니가 함께 디자인된 한정판 황금소코인 3종도 출시됐다. 금 중량을 11.25g(97만2000원), 18.75g(161만2000원), 37.5g(317만6000원)로 각각 달리해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프랑스 최고의 와인으로 평가 받는 샤또 1등급 와인 5병으로 구성된 5대 샤또 와인세트(600만 원)를 비롯한 샤또 페트뤼스2014(550만 원) 등을 한정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의 '프리미엄 선물세트'.

GS25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선물로 설 명절 인사를 대신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플렉스' 콘셉트의 프리미엄 상품부터 생필품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말했다.

내달 3일까지 설 선물 판매에 나서는 CU는 코로나19 시국에 맞춰 방문 대신 명절 선물로 대신 마음을 전하려는 고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1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상품 비중을 전체 상품의 약 30%로 전년 대비 5%p(포인트) 가량 확대했다.

CU의 이번 설 선물 중 최고가 상품은 최고 1595만 원에 이르는 이동식 주택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끼리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면서 주말 펜션처럼 이용하기 위해 이동형 주택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어 설 선물로 준비했다는 게 CU측 설명이다.

이번에 CU가 소개하는 이동형 주택은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업체 성현하우징의 대표 상품들로 화장실, 거실, 침실, 주방으로 구성된 복층 고급형 주택(1595만원)과 주방, 화장실, 거실로 구성된 단층 고급형(1,045만원), 단층 실속형(935만원) 등 3가지다. 구입 방법은 가까운 CU를 방문해 설 카탈로그 후면의 주문서를 작성하고 해피콜 상담을 거친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된다.

아울러 집콕족을 겨냥해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239만 원), SK매직 파워워시 식기세척기(99만 원), 삼성 크리스탈 UHD TV(92만 원~) 등 최고급 가전부터 에브리봇 로봇청소기(41만 원), 르젠 스팀 가습기(7만7000원) 등 중소형가전까지 총 30종의 디지털 가전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이마트24의 '소 문양 골드바' 등 금 선물세트.

세븐일레븐은 신축년 새해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판매 상품으로는 '순우리 한우프리미엄 특선1호(52만 원)', '정성만찬 고창한우프리미엄 (3kg, 54만 원)' 등 총 7종이며 이달 말까지 비씨·농협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와인 대중화 트렌드에 편의점 와인 시장이 날로 성장함에 따라 이번 와인 선물세트 품목 수를 지난 추석 대비 2배 가량 늘렸다. 대표 상품은 △샤또 라피트 로칠드 2010 △샤또마고 2016 △샤또 라뚜르 2012 △샤또 오브리옹 2016 △샤또 무통 로칠드 2016 등 총 5종으로 130~200만 원 가격대의 고가 와인 상품이다.

이마트24도 18일부터 24일까지 '소 문양 골드바' 10돈(37.5g, 20세트), 1돈(3.75g, 400세트), 아기천사돌반지 1돈(200세트) 등 총 3종의 금 선물세트를 선착순 한정 판매한다. 또한, 코지마 안마의자를 4종(168만 원~228만 원)과, 오엘라무선진동마사지건(4만9900원)부터 어깨·발 마시지기(4만9000원~17만9000원), 마사지매트(129000원)도 준비했다.

미니스톱은 골프를 즐기는 2030 고객을 겨냥해 심맥스 아이언 8개 카본세트(120만 원)와 젝시오 11 여성 드라이버(80만 원)을 비롯해 미국산 소고기 중 최상위 등급인 프라임 등급의 소고기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남주현 기자 jooh@

## 백화점 "올 신년 세일은 온라인에서"

### 더현대닷컴 '5주년 페스티벌'
### 300여개 브랜드 신상품 할인
### 갤러리아몰 'G캐시 이벤트'
### 롯데온 '시즌오프 통합전'

백화점 업계가 연초 화력을 온라인에 집중한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함에 따라 계획했던 약 2주간의 1월 신년 세일을 실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연초 대목을 놓치면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 세일을 통해 협력사의 겨울 상품 재고 소진을 도우면서 최대한 빠진 매출을 보전해보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백화점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은 5주년을 앞두고 8일부터 17일까지 '더현대닷컴 5주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외패션·잡화·리빙 등 3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겨울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10~30% 할인해 판매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대 20% 할인 쿠폰 제공 △구매 금액대별 '더머니' 15% 적립금 증정 △현대백화점카드 결제고객 할인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8일부터 17일까지 현대백화점그룹 멤버십 'H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매일 ID당 2개씩 최대 20% 할인 쿠폰(최대 5만 원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앱 구매 고객 대상으로 구매 금액대별 15%에 달하는 '더머니' 적립금(최대 12만 원)을 증정한다. 여기에 15일 단 하루 현대백화점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 대상으로 15% 할인(최대 3만 원)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백화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백화점 세일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신, 협력사의 겨울 상품 소진을 돕기 위해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새해를 맞이해 언택트 쇼핑 생활을 위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강화한다. 갤러리아 온라인몰에서는 17일까지 G캐시 증정 이벤트, 새해맞이 2021 할인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10·20·30만 원 이상 구매 시 3000/6000/9000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G캐시(갤러리아 모바일 적립금)를 증정한다. 또한, 갤러리아몰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G캐시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7일까지 진행하는 '2021 어서오소, 새해할인 준비했소' 기획전에서는 의류, 화장품, 가방 등 최대 70%까지 할인한다. 대표 할인 브랜드로는 △간트 △빈폴레이디스 △지컷 △블루독 등이 있다.

롯데쇼핑은 17일까지 롯데온 내 롯데백화점몰에서 시즌오프 통합전을 열고 20~30% 인하된 '20 FW(가을·겨울)' 상품을 판매하는 한편 구매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구매 시 최대 7% 상당의 엘포인트(L.POINT)를 증정하는 사은 이벤트를 온라인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10일까지는 폴로 랄프로렌, 타미 힐피거, 빈폴, 해지스, 라코스테 등 16개 브랜드가, 11일부터 17일까지는 아디다스, 캘빈클라인진, 캠퍼 등 15개 브랜드가 구매 사은 이벤트에 참여한다. 기간 중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20·40·60만 원 이상 구매하면 L.POINT 1·2·4만 점을 증정한다.

명품 화장품 브랜드 디올과 입생로랑의 구매 사은행사도 준비했다. 10일까지 롯데백화점몰에서 디올 또는 입생로랑 제품 7·15만 원 이상 구매 시 L.POINT 5000·1만5000점을 적립해 준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마트 "제주 참조기 맛보세요"** 이마트가 9년 만에 풍어를 맞은 제주 참조기 소비 촉진 행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마트는 13일까지 제주산 참조기(해동)를 10마리 9900원에 판매한다. 전년 동기 대비 28%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이마트는 "제주 지역 연근해에서 잡히는 참조기 풍어에도 재고 급증과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맞은 어가를 돕기 위해 소비 촉진 행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이마트

## "올려도 줄 선다"… 루이뷔통 25% 인상

### 100만원 이하 제품 기습 인상
### 에르메스도 일부품목 비싸져

새해 벽두부터 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가 기습 가격 인상에 나섰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루이뷔통은 이날 0시가 되자마자 가방을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25% 이상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가격이 오른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미니 핸드백과 파우치다. 포쉐트 악세수아 nm 핸드백은 78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25.6%, 미니 포쉐트 액세서리도 41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2.0% 올랐다. 토일레트리 파우치 15도 51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7.6% 가격이 크게 올랐다.

루이비통 키파우치도 기존 28만5000원에서 34만 원으로 19% 가까이 대폭 인상됐다. 인기 클러치 백인 토일레트리26의 가격도 64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약 11% 상향조정됐다.

루이뷔통의 스테디셀러로 알려진 핸드백 알마BB도 모노그램, 다미에 패턴 제품은 기존 172만 원에서 182만 원으로 4% 올랐다.

루이뷔통은 지난해 3월 가격을 올리고 두 달 만인 5월에 또다시 가격을 인상했다. 이후 일부 제품의 가격을 소폭 조정하다, 8개월 만에 100만 원 이하 인기 제품을 중심으로 다시 가격을 올렸다.

루이뷔통뿐만이 아니다. 앞서 에르메스도 지난 5일 일부 품목에 대해 국내 가격을 인상했다.

에르메스 입문백으로 알려진 '가든파티 36' 핸드백은 기존 473만 원에서 482만 원으로 2.1%, 피코탄18 핸드백은 354만 원으로 2.1% 소폭 조정됐다. 슬리퍼인 오란과 실크 스카프인 카레는 3만 원씩 비싸졌다.

프랑스 명품 패션브랜드 셀린느도 새해 첫날부터 국내 가격을 올렸다. '러기지백 나노'는 305만 원에서 315만 원으로 약 3% 소폭 조정했다. '벨트백 마이크로'도 10만 원 비싸졌다.

이같은 잇단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기 명품매장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연말연초부터 가격 인상 소문이 돌면서 온라인 명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픈런'(매장문이 열리자마자 달려서 뛰어들어가는 행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샤넬 등 다른 주요 명품 브랜드도 뒤이어 상반기 내에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혜지 기자 heyji@

## KT&G, 해외 진출 국가 100개 돌파

### 지난해 23개 신규 시장 개척

KT&G의 해외 진출국이 100개국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23개국을 신규 시장으로 개척한 결과 해외진출국은 103개국으로 늘어났다. 또한, 신규 진출국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집중 육성하여, 연간 판매량이 1억 개비 이상인 5개국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KT&G는 글로벌 초슬림 1위 담배인 '에쎄(ESSE)'를 현지 시장 특성에 맞게 출시하는 대표 브랜드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으로 에쎄는 몽골에서 판매량 1위를 달성하고 있다. 세계 2위 담배 소비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담배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향을 활용한 에쎄 등을 선보여 지난해에만 40억 개비 이상이 팔렸다. '보헴(BOHEM)', '타임(TIME)' 등 레귤러 담배 브랜드도 국가별 맞춤형 제품군을 강화하며 진출 국가를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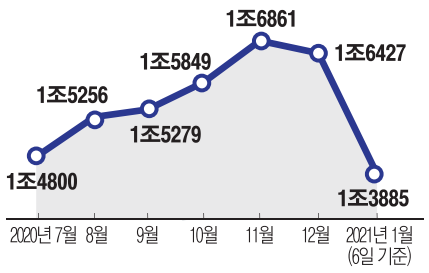
KT&G는 향후 해외법인 추가 설립은 물론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백복인 사장은 "KT&G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해외 시장의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저력을 발휘했다"며, "2025년 글로벌 Top4 비전 달성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을 더욱 가속화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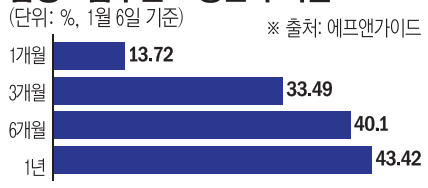
유현희 기자 yhh1209@

# 삼성전자 날아오르자… 그룹주펀드 수익률도 '훨훨'

**최근 6개월간 삼성그룹주펀드 설정액**(단위: 억 원, 월초 기준)




**삼성그룹주펀드 평균 수익률**
(단위: %, 1월 6일 기준)
※ 출처: 에프앤가이드




## 삼성SDI 주가 3개월 새 59.9% 급등… 삼성전기도 29.5% ↑
## 25개 펀드, 한달 평균 수익률 13.72%… 43개 테마 중 '2위'

동학개미가 '삼성'에 꽂혔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SDI도 강세를 달리면서 삼성그룹주펀드에 베팅한 개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다.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6일 기준 삼성그룹주펀드 25개의 최근 한 달 평균 수익률은 13.7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 펀드(12.44%), 해외주식형 펀드(5.30%) 수익률을 모두 앞질렀으며 43개 테마 중 레버리지(18.12%) 다음으로 높았다.

기간을 넓혀보면 수익률은 더 높았다. 삼성그룹주펀드의 최근 3개월, 1년 평균 수익률은 각각 33.49%와 43.42%다.

개별펀드 가운데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하는 '한국투자KINDEX삼성그룹주SW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1년 수익률이 59.70%로 가장 우수했다. 이 밖에도 '삼성KODEX삼성그룹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51.25%)', '미래에셋TIGER삼성그룹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38.39%)'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피200과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주펀드는 삼성전자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펀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3개월 사이 삼성전자 주가는 40.5% 상승했고, 5일 시가총액 5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삼성SDI 강세와 맞물리면서 수익률에 탄력이 붙었다. 같은 기간 삼성SDI는 59.9%나 뛰었다. '한국투자KINDEX삼성그룹주SW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경우, 삼성SDI(27.49%)의 비중이 삼성전자(25.54%)보다 크다. 이밖에 삼성전기 역시 29.5% 뛰면서 흔히 '삼성 후자'라고 불리는 IT 계열사 주가도 오르면서 힘을 보탰다.

지난 하반기 삼성전자 랠리에 맞춰 삼성그룹주펀드에도 돈이 몰렸다. 작년 2월 2조 원에 달하던 삼성그룹주펀드 설정액은 지난 7월초 1조4800억 원까지 줄었다. 이후 변동폭이 크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삼성그룹주펀드는 10월 초 1조5849억 원, 12월 초 1조6427억 원으로 투자액이 늘었다. 이 기간 삼성전자는 '5만 전자'에서 '8만 전자'로 거듭났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들이 환매에 나서면서 6일 기준 설정액은 1억3885억 원으로 줄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국민연금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딴지 건 까닭은

**'저금리' 장기화에 투자처 고갈**
**배당확대 등 '주주환원' 목소리**
**주요 대기업 지분 5~10% 보유**
**투자목적 '일반투자' 잇단 전환**

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딴지 걸기는 '대기업 저승사자'의 입지를 탄탄히 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경영에 더 적극 참여하고,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책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본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부터 대기업에 평균 5~10% 내외 수준의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10.90%(지난해 9월 기준), SK하이닉스 10.99%, LG화학 10.33%, 셀트리온 9.16% 등에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기업엔 5%를 내외 수준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투자기업에 대한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고채권(3년) 수익률은 1% 이하로 거래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국민연금이 배당 확대에 눈을 돌린 것은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이익 대비 배당의 비율)이 다른 나라를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과거 10년 평균 23% 수준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33%까지 상승했지만, 영국 55%와 미국 40~49%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국마저도 35%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40%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유난히 상속이 많았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당금을 통한 상속세 재원이 이어지면서, 배당금의 맛을 보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제한하는 5%룰 완화 이후 늘어난 개인투자자들로 여론 형성까지 수월해지면서 든든한 아군까지 확보했다.

국민연금이 결과를 뒤집지 못할 것으로 뻔히 보이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반대 사안에 대해서 나름의 이유는 명확했던 것이다.

지난해 LG화학이 배터리사업부의 물적분할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LG화학의 분할 발표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총 3000억 원 규모(총 51만 주)의 지분을 시장에 투하했다. 9월 15일 70만 원을 웃돌던 LG화학 주가는 분할 계획 발표 이후인 10월 30일에 61만1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56개 주요 상장사의 투자 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꿨다. 이후 2분기에는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등 16개 상장사, 4분기에는 롯데하이마트 삼양식품 등 4개 상장사를 추가해 76개 기업을 일반투자로 분류해 놓고 있다.

올해에도 국민연금은 1월 중순부터 하순에 걸쳐 주요 투자 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을 대거 변경해 주주환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람 기자 hura@

# 쿠팡, 나스닥 상장설 다시 '수면 위로'

**블룸버그통신 "2·4분기 가능성… 기업가치 300억 달러 이상"**

쿠팡이 기업공개(IPO)를 본격화한다. 나스닥 상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쿠팡이 IPO가 올해 2·4분기에 진행될 수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300억 달러(약 32조6700억 원)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는 쿠팡에 27억 달러를 투자해 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미국 증시 상장이 목표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난해 소프트뱅크 주변에서는 "비전펀드 투자사 중 다음 IPO 타자는 쿠팡"이라는 말이 돌았다.

쿠팡은 올해부터 4인 각자 대표 체제에서 강한승, 박대준 2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창업자인 김범석 대표는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특히 김범석 대표는 미국 나스닥 상장 준비와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전념할 것이란 관측이 쿠팡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의 강한승 경영관리총괄 대표가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박대준 대표는 쿠팡이츠 등 신사업을 맡는다.

쿠팡은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간편 결제 서비스인 쿠페이를 자회사 쿠팡페이로 분사시키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론칭했다. 자회사인 쿠팡로지틱스는 택배 사업(화물차 운송사업자)에 재도전하며 국토교통부에 택배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 NH투자, 해외주식 기초자산 등 ELS 7종 모집

NH투자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7종을 8일 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ELS 20353호는 발행 후 6개월 조기상환 조건이 85% 이상이면 상환되는 조기상환추구형 상품이다. 에스엔피500지수(S&P500), 유로스톡스50지수(EuroStoxx50), 코스피200지수(KOSPI200)를 기초자산으로 한 만기 3년 상품으로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85%(6,12,18개월), 80%(24,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연 3.20%(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3.20%(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ELS 20357호는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4개월 단위 조기상환 평가를 하는 상품이다.

손엄지 기자 eoml@

# 증시 대기자금 70兆… "유동성 장세 당분간 계속"

**투자자예탁금 68조312억**
**MMF형 CMA 잔고도 3.2조**
**대주주 완화 '큰손' 대거 유입**

개인투자자 자금이 끊임없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기성 자금만 70조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새해가 바뀌면서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난 큰손들이 증시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분석한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일 기준 투자자예탁금 68조312억 원을 기록해 유례없는 70조 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돈을 의미한다. 예탁금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투자자의 증시유입 가능성이 크다.

대기성 단기자금으로 분류되는 머니마켓펀드(MMF)도 3조 원대로 몸집을 키웠다. 5일 기준 MMF형 CMA 잔고는 3조2302억 원으로 집계됐다. MMF는 만기 1년 이내 국공채나 기업어음 등 단기 우량채권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해 투자자들이 단기자금을 넣어두는 용도로 활용하곤 한다.

이어 또 다른 단기자금으로 분류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5일 기준 CMA 개인계좌 잔액은 58조6081억 원으로 나타났다. CMA 역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데, 입출금이 자유로워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파킹통장' 용도로 사용된다.

'빚투'도 역대급으로 늘어났다.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20조 원 경신을 앞두고 있다. 5일 기준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9조6241억 원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9조8194억 원, 9조8047억 원이 이용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 빌린 돈을 의미한다. 신용거래 규모가 증가하면,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이어져 주식시장 활황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통상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 활용 규모가 컸지만, 최근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용거래 비중이 더 높아진 게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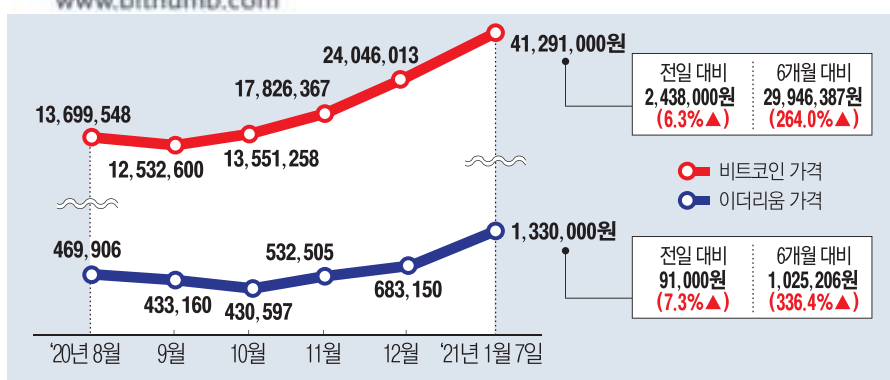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 자금이 주식시장에 더욱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위험자산으로 쏠릴 것이란 분석에서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경로로 풀린 유동성은 대규모 IPO를 계기로 증시에 유입됐고,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며 "새해 이후 대주주 요건에서 자유로워진 큰손들이 재차 주식구매에 나선 듯 보이며,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조 원 이상 증가하는 종목이 늘면서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인아 기자 ljh@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2021년 1월 7일 17:00, KST)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코인명 | 가격(원) | 전일대비 등락(원) |
|---|---|---|---|---|---|
| 비트코인캐시 | 496,400 | 23,400 (4.9%▲) | 이오스 | 3,599 | 331 (10.1%▲) |
| 리플 | 324 | 70 (27.6%▲) | 비트코인골드 | 11,310 | 1,250 (12.4%▲) |
| 라이트코인 | 185,400 | 5,200 (2.9%▲) | 이더리움 클래식 | 8,155 | 155 (1.9%▲) |
| 대시 | 108,200 | 7,000 (6.9%▲) | 퀀텀 | 3,319 | 360 (12.2%▲) |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3기 신도시〉

# 정부가 끌어올린 창릉·대장 땅값…'보상 갈등' 불씨 되나

## 공시지가 현실화로 창릉 11.9%·대장 10.1% 토지가치 상승

## 일부 20% 넘게 올라 토지보상 증액 명분…신도시 착공 지연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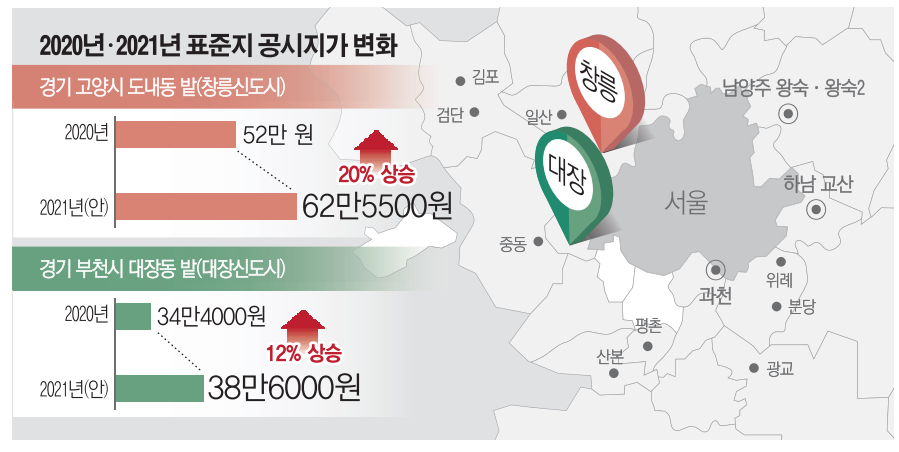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에 속도를 내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도 공시지가가 10% 이상 오르게 됐다.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고 그로 인해 신도시 착공을 늦추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21년도 공시지가안(案)을 공고한 표준지 가운데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에 있는 102필지(창릉 81필지·대장 21필지) 공시지가를 전수 분석했다. 지난해 이들 필지 공시지가 총액과 비교해봤을 때 창릉지구는 11.9%, 대장지구는 10.1% 토지 가치가 상승했다.

표준지는 각 필지 가운데 토지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필지를 말한다. 다음 달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나머지 필지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기준으로 쓰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로 다른 땅들의 공시지가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기 신도시 부지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20% 넘게 올랐다. 창릉지구에 속한 도내동의 한 밭은 지난해 1㎡당 52만5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올해는 62만5500원으로 20.1% 뛰었다. 대장지구에선 대장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공시지가가 34만4000원에서 38만6000원으로 12.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다른 필지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올해 공시지가가 10% 오르는 비율이 창릉에선 88.9%(72곳), 대장에선 54.5%(12곳)에 이르렀다.

이같이 공시지가가 줄줄이 오른 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8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국토부 정책 기조 때문이다. 공시지가 신뢰성과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에서다. 국토부는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국 평균 10.4% 올릴 예정이다.




창릉지구나 대장지구 같이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는 곳에선 공시지가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 토지 보상금을 평가할 때 핵심 지표로 쓰이기 때문이다. 토지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다른 지역과 달리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선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건 이 같은 배경에서다. 지난해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지구에서 보상 절차에 들어간 국토부는 남은 창릉지구와 대장지구 보상 공고도 상반기 중으로 낼 계획이다.

감정평가업계에선 공시지가 상향이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가 지난해 난 창릉지구와 대장지구에선 지난해 공시지가가 보상 기준이 된다. 하지만 여기엔 '시세'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익명을 원한 한 감정평가사는 "공시지가가 감정평가 기준이긴 하지만 시세를 반영, 보정하도록 돼 있다"며 "공시지가가 오르면 시장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보상 규모가 커질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토지주로선 공시지가 상향이 보상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 토지의 시장 가치 상승과 보상금 증액을 주장하는 명분이 되는 셈이다.

이는 3기 신도시에 과도한 현금 보상이 풀리는 걸 막겠다는 국토부의 또 다른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 국토부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다른 땅으로 토지 수용을 보상하는 제도)을 강화하는 등 현금성 보상을 줄이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투자 종잣돈으로 재유입돼 시장을 과열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다.

보상금을 줄이려는 공기업과 증액을 요구하는 주민이 부딪히면 3기 신도시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토지 보상 작업을 시작한 과천지구와 교산지구, 계양지구에선 토지 감정평가를 끝내고도 금액 적절성을 둘러싼 공기업과 토지주 간 이견으로 보상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중대재해법·건산법…건설업계, 새해부터 '암초'

## "현실 반영 안해" 법 제정 중단 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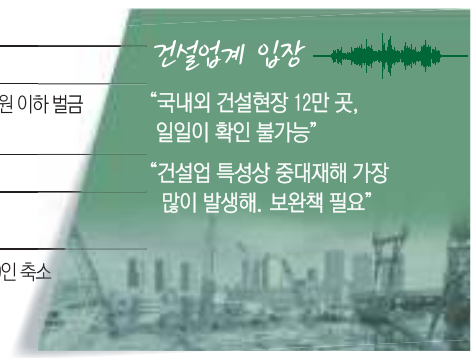
## "건산법 개정안, 관치 의도" 반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주요 내용**

| | |
|---|---|
| 중대재해 정의 | 사망자 1명 이상 |
|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 –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br>– 법인 : 50억 원 이하 벌금 |
| 적용 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 |
|---|---|
| 주요내용 | –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 기존 13인 → 9인 축소<br>– 운영위에서 건설협회장 배제<br>– 운영위 안건 국토부와 사전 협의 등 |




새해부터 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졸속 입법으로 '암초'를 만났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 대표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건설업계는 국내·외 수만 곳에 달하는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특성상 중대재해법 통과 시 가장 큰 후폭풍을 겪을 전망이다. 또 민간 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운영 체제를 바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다음날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통과에 비상이 걸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업 대표 처벌 조항이 명시됐다. 또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건설업의 특성도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전날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은 통상 업체당 300곳 이상"이라며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곧 올 수도 있는 만큼 법 제정을 중단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재계의 호소에도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앞선 논의 과정에선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 처벌 하한을 애초 정부 협의안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는 데 그쳤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국외 사업장은 해당 국가의 관련법도 적용받는데 중복 규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고 대표이사 처벌 조항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건설 현장에서 모듈 공법과 로봇 사용을 시도했는데 (법 제정으로) 사람을 더 적게 쓰는 방향을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산법 개정안도 건설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건설협회장을 배제하고 건설사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출자한 순수 민간기관으로 이번 개정안 통과 시 '관치 운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산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소규모 공공 재건축' 용적률 최대 360%

## 200가구 미만 정비사업 20~50% 임대주택 기부채납

### '용적률 120% 상향' 개정안 발의

정부·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준호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속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를 빌렸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법안 마련에 함께 참여했다고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정책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란 주민이 200가구가 안 되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노후 주택 비중이 3분의 2가 넘고 대지면적 1만 ㎡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상한을 법정(法定) 기준보다 120% 높여주도록 했다. 용적률 상한이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대신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주택 가운데 20~50%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천 의원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주택을 지분형 주택(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원주민이 자금 마련 부담 없이 새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성이 부족해 그간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서울지역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을 언급한 바 있다.

천 의원은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노후 연립주택 단지 등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작년 막차 로또 분양 '힐스테이트 강일'서 청약 만점 나와

## 당첨 최저 가점 64점…15개 중 13개 타입 65점 넘어

지난해 서울의 마지막 로또 분양 단지로 불렸던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조감도〉' 아파트에서 청약 만점자(84점)가 나왔다. 당첨 최저 가점 또한 64점에 달했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전용면적 101㎡D형 기타지역에서 84점 만점자가 당첨됐다. 전체 15개 타입 중 당첨 가점 커트라인(최저 가점)은 64점으로 84㎡G형에서 나왔다. 최저가점이 65점 이하인 타입은 64점과 65점(101㎡B) 단 2개였다. 나머지 13개 타입은 당첨 최저가점이 모두 65점이 넘겼다. 고가점자들이 무더기로 쏟아진 셈이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에서 458가구 모집에 11만7035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255.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210대 1로 전용 101㎡C타입 기타 전형에서 나왔다. 특별 공급에서도 2만380명이 줄을 선 것을 감안하면 무려 13만명이 이 단지 청약에 움직인 것이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고덕강일지구에서 진행한 첫 민간 분양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약 223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84㎡형이 분양가가 6억9830만~7억9520만 원, 전용 101㎡형은 8억3000만~8억9990만 원 수준으로 주변 단지들과의 비교해 시세 차익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 국토계획법, 7월부터 시행

서울 강남에서 개발을 통해 얻은 '공공기여금'을 강북지역의 균형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공포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12일 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는 개발사업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고 개발 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된다.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에만 적용된다. 공공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쓰이게 된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 "고소장 들고 檢 왔더니… 이건 경찰로 가세요" 당황

### 검·경 수사권 조정 '혼선'

**접수 반려에 민원인 '우왕좌왕'**
**"5억 미만 재산범죄는 경찰에"**
**서울중앙지검 1층에 안내문**
**경찰, 수사권 시작부터 비난 여론**

"이건 경찰로 가야 해요 검찰로 가야 해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일선의 수사 실무가 크게 변했다. 시민들은 시행 첫 주부터 고소·고발장을 들고 우왕좌왕했다.

7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바뀐 제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다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여전히 많았다.

◇**검찰, 6개 범죄만 직접 수사**=이달 1일부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이상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 범죄 등만 직접 수사한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시민들의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김모 씨는 "피해 금액이 기준보다 적어 (검찰청에서) 접수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겨우 왔는데 난감하다"고 당황스러워했다.

안내문을 보고서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조모 씨는 "이게 경찰로 가야 하는 사건에 포함되는지 몰라 일단 접수하려 했었다"며 "경찰로 가야 하는 사건이라고 안내받았다"고 발길을 돌렸다.

접수가 반려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노년의 민원인 2명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법 사잇길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헤매기도 했다.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두 건물을 번갈아 보던 서모 씨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냐"고 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5억 원 미만 재산범죄 등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대상범죄 예시'라는 안내문을 1층 고소·고발 접수 전담관실 앞에 붙였다.

수사 실무는 지각변동의 폭풍전야인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경찰과 수사 협조 의무가 명시됐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에 수사종결권 우려**=경찰은 수사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격 운영에 들어갔지만 수장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등 반쪽 출범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한 대처가 잇따라 부각되면서 여론은 좋지 않다.

경찰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할인 양천경찰서 이화섭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 차관 사건의 경우 서초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혐의로 파출소가 넘긴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경찰, 양대 권력 기관이 추구하는 바는 국민의 인권을 더 존중하고 국민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라며 "적어도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텅 빈 교실… 온라인 졸업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 확산되고 있는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SK네트웍스〉

##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회장 檢 소환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00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횡령·배임 정황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장기간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 오다 지난해 하반기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

이번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거주지와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종합상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SKC 자회사인 SK텔레시스 전직 임원 여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색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아버지는 고(故) 최종건 전 선경그룹 회장으로 SK그룹의 전신인 선경의 창업주다. SK그룹은 고 최종건 회장이 급환으로 타계해, 동생인 고 최종현 회장이 기업을 물려받았다. 현재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은 최종현 회장의 장남이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회장을 맡았다.

SK네트웍스는 1953년 선경직물이라는 이름으로 최종건 전 회장이 창립한 회사다.

박기영 기자 pgy@

## '집유 중 마약' 황하나 다시 구속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다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이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황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박영사 신간도서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앤케어 대표이사
전) 김정문알로에 대표

www.pybook.co.kr 박영사

# 초등생, 코로나 여파 '발달 격차' 심화

### "질문해도 응답 없어"… 학교생활 많지 않아 상호작용 서툴러
### 저소득층 가정 아동 더 심각… "저학년만큼은 대면수업해야"

지난해 10월 인천시 동구 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초등학생들의 키는 훌쩍 컸지만 생각과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습 격차'에 이어 '발달 격차'를 주목하고 있다.

7일 교육현장에 따르면 등교 일수가 줄고 다양한 활동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감각, 정서 발달의 기회를 놓치는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질문해도 '무반응'=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기획실장은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해도 '무반응'이거나 '미반응'이라는 의견이 많아졌다"며 "학생들이 글씨를 쓰거나 가위질, 종이접기 등을 하는 조작 활동도 눈에 띄게 서투르다"고 말했다.

'발달 격차'는 신체와 감각, 정서 활동에 따라 학생 간 벌어지는 결손 및 차이를 뜻한다. 최근 국가교육회의는 '학생의 발달 특성에 대해 이해를 하는 교사'의 덕목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부모 관심도와 경제력 등 가정환경에 따른 학생 간 학습 격차·발달 격차 현상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발달 격차 문제는 학습 격차에 비해 인식이 부족하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천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는 교육 격차에 대해 학습격차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학습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를 어느 정도는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일수록 우려=발달 격차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적합한 시기 때문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신체와 인지, 정서 발달이 이뤄지려면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타인과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일수록 발달 저하가 더 심해진다는 지적이다.

신체 발달도 마찬가지다. 천 정책기획실장은 "움직임이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하고 뇌의 발달이 지체돼 신체나 발달 격차가 곧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저학년부터라도 등교해야=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만큼은 대면수업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 실장은 "초등 저학년은 학교에서 상호작용과 신체 활동이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저학년부터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식은 온라인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학교에서는 동료 학생들과 프로젝트, 토론, 실험 등 협업 활동을 해야 한다"며 "돌봄, 사회화, 코칭 등 학교의 역할을 재설정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서울 중학교 2·3학년 '미니 자유학기' 도입

### 학기말 등에 진로체험 활동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2·3학년에 자유학년제의 취지에 맞는 '미니자유학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는 기본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2021학년도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을 밝혔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이 1년 동안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참여형 수업과 진로체험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경험하는 제도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전면 도입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나타난 학습격차, 기본학력 부실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이 강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기본학력보장 집중시기'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본 학력을 진단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 특성상 학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대책도 내놨다.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해 학생의 현재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는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연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기별로 2회 이상 각 가정에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해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학생이 참여해 교사와 상호작용과 즉각적 의견 주고받기가 가능한 토의·토론, 프로젝트 등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중학교 2·3학년은 중간·기말고사 사이나 기말고사 이후 학기 말에 자유학년제 취지와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보다 자율성을 갖고 이 같은 교육과정을 편성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작… 가·나·다군별로 3개 대학에 지원 가능

입시톡톡

### 일반대 11일, 전문대 18일까지
### 수시 이월·국어 성적 등 변수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7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결시율 상승에 따른 수시모집에서의 이월 인원, 어려웠던 국어 등 수험생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원서 접수 미확인 등 실수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전국 4년제 대학은 11일까지, 전문대학은 18일까지 이뤄진다. 4년제 대학 정시모집은 가·나·다군별로 1개교씩 총 3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정시에서도 면접과 실기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모집군별 전형 기간은 다르다. 가군은 이달 13~20일, 나군은 21~28일, 다군은 29일~2월 5일이다.

전문대 정시모집은 특별한 제한 없이 대학 간 복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시모집에 1곳이라도 합격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카이스트(KAIST)·유니스트(UNIST)·디지스트(DGIST)·지스트(GIST)·경찰대 등은 수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표준 공통원서 접수서비스를 대행하는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4년제 대학 188곳, 전문대학 135곳, 기타 5곳 등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올해 정시 모집인원은 총 8만73명이다. 전체 선발 인원의 23.0% 수준으로 전년도 7만9090명보다 983명 늘었다.

전국 전문대의 정시모집 총인원은 2만5447명이다. 2020학년도보다 13.6% 줄었다. 다만 다음 달 6일까지로 예정된 수시모집 결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면 실제 정시모집 인원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 입학처 등을 통해 최종 모집 인원을 확인해 봐야 한다. 전문대들은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 이후 결원 충원을 위해 2월 28일까지 자율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정시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 국어 성적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정시 최종 선발 인원은 총 3136명으로 서울대 798명, 연세대 1412명, 고려대 926명으로 집계됐다.

손현경 기자 son89@

# 오롯이 나와 독대하려 지은 '은둔자의 집'

## 경주 '독락당'

조선 주자학의 적통을 이은 회재 이언적
(晦齋 李彦迪, 1491~1553)이 살았던 집이다.
몹쓸 세상 버리고 은둔했던 곳이다.
독락당(獨樂堂)이라, '홀로 즐기는 집'이다.
고고한 고독을 벗 삼아 은거했나?
도학자의 본분은 '열공'에 있으니
세상을 등지고서야 학문에 표 나게 정진했나?
둘 다 누렸을 걸 어림짐작할 만하다.
분명하기론 회재의 낙심이 실린 집이라는 거다.
풍진세상에서 일단 달아나
숨기 위해 지은 집임이 완연하다.

**조선 주자학 적통 이은 회재 이언적**
**벼슬서 쫓겨나 낙향해 고쳐 만들어**

**집 높이 낮고 담장길은 미로 같아**
**세상과 멀어져 은둔하고 싶었나**

**독락당 주변을 통째로 정원 삼고**
**자계천 냇가 정자에 앉아 헛헛함 달래**

미로 같은 담장 길을 지나면 한 폭의 그림 같은 시냇가가 펼쳐진다. 회재 선생은 자계천 냇가에 지은 독락당 계정(溪亭)에 앉아 산수(山水)를 즐기며 헛헛한 마음을 달래곤 했다.

회재는 중신 김안로의 중용을 반대하다 벼슬에서 쫓겨났다. 당대 최고 지식인으로 탕탕 잘나가다 졸지에 추락했다. 야심만만한 마흔한 살 때였음을 생각해보라. 코피를 서 말쯤 쏟고도 남을 울분이 왜 없었으랴. 정쟁의 아귀다툼과 인간의 꿍꿍이에 대한 환멸이 컸을 테다. 에라, 마음의 문고리를 안으로 걸어 잠그고 돌아앉으리. 회재가 찾은 자구책은 은둔이었다. 아니 은둔을 상회하는 자폐였다. 독락당 일원의 모습에서 그가 지닌 둔세(遁世)의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끈 떨어져 앙앙불락이 많은 이에게 낙향은 버겁다. 회재가 그랬다. 그는 본가가 있는 경주 양동마을 대신 안강면 자옥산 아래 소실의 집으로 내려갔다. 여기엔 아버지가 지은 작은 정자도 있었다. 회재가 서둘러 먼저 한 일은 건축이었다. 이왕에 있었던 집들을 대대적으로 고치고 늘렸다. 정자가 딸린 별서(別墅) 독락당을 새로 지었다. 그저 있던 방 하나 대충 차고 앉아 청승이나 떨 협량이 아니었던 셈이다.

의아한 건 집의 높이가 하나같이 낮다는 사실이다. 후대에 세운 솟을대문만 껑충해 얄궂다. 담장 밖에서 보면 지붕만 슬쩍 보인다. 담이 높아서가 아니다. 기단을 낮춰 지은 걸 보면 일부러 내려앉혀 만든 집이라는 걸 짐작할 만하다. 심지어 터부터 깎아 낮춘 게 아닐까. 복잡한 담장의 구성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다. 상당한 건축적 식견과 미적 센스가 없이는 만들어낼 수 없을 이중삼중 구조다. 그러니 당혹스럽다. 어디가 어디인지 한눈에 감 잡기 어려운 게 아닌가. 안채와 마름들이 기거하는 공수간, 그리고 독락당으로 들어가는 길이 접하는 담장길 삼각지는 절묘해 찬탄을 터뜨리게 하지만 미로에 들어선 것처럼 어지럽기도 하다.

집과 담을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은둔이란 속세에 자취를 남기지 않는 일이다. 눈길을 걸어도 발자국이 남지 않아야 진짜 끝내주는 은자다. 회재는 한사코 세상과 멀어지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낮은 집으로 꾹꾹 눌러 주저앉힌 자신의 겸손한 정신을 표방하고, 겹겹의 흙담으로 세상의 눈들을 차단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오라는 이, 온다는 이, 이도 저도 다 싫었을 테다. 오로지 면벽처럼 자신과 오롯이 독대하고 싶어 경계를 짓고 싶었을 테다. 그가 내심을 실어 지었을 독락당을 보면 알 수 있다. 가장 외진 안통 가장자리에, 가장 조촐한 구색으로 지어놓지 않았는가.

그렇게 독락당을 음전하게 짓고서도 마음은 갈피없이 흔들렸나보다. 시로 쓰기를, 술잔을 기울여 근심을 끄고 웃었다고 했다. 공명에 쫓기는 관직에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한탄도 했다. 또 쓰기를, 솔과 대를 무수히 심었다고, 새와 물고기가 내 얼굴을 익혀 알아보더라고 했다. 낡은 추억의 악보만 남았을 뿐, 회재는 더 이상 벼슬이나 현세를 기려 노래할 염이 없었다. 세상은 본시 아름답고, 돌아다니는 사람 모두가 성인이라는 게 고명한 유자(儒者)들의 뉴스였으나 이도 속이 편할 때라야 접수가 가능하다.

결국 회재의 허탈한 마음은 흘러 자연으로 귀환했음인가. 자계천 냇가에 지은 독락당 계정(溪亭)에 앉아 산수와 교제하기를 습으로 삼았다. 일부러 공들여 마당에 정원을 꾸미진 않았다. 독락당 주변의 경물들에 사산오대(四山五臺)라 이름 붙이고 통째 정원으로 삼았다. 부글부글 끓는 가슴을 산 아니고 물 아니면 무엇으로 헹구랴. 한 쌍의 부부로 일컬어지는 하늘과 땅, 비밀스러운 언어가 스멀거리는 숲이 아니면 어디에 대고 도력을 실험하랴. 자연미의 궁극에 도달하고자 시어를 벼렸지만, 거기에 허세에 다름 아닌 달관의 낌새나 유희가 일체 없는 건 자아 부양의 용도로 시를 썼기 때문이리라.

회재는 독락동 은거 5년이 지나 다시 벼슬을 해 승승장구했다. 58세엔 다시 정쟁에 치여 유배를 당했으며, 배소에서 병으로 타계했다. 벼슬이 곧 우환이었다. 닭벼슬은 곱기라도 하지. 손가락질이야 시대의 파행에다 해야겠지만.

글/박원식 객원기자 brovopress@etoday.co.kr
사진/주민욱 프리랜서 minwook19@hanmail.net

**[답사 Tip]**

독락당은 꼼꼼히 살펴볼 게 많은 고택이다. 집과 정자에 걸린 퇴계, 이산해, 추사. 한석봉 등의 현판 글씨도 감상할 만하다. 회재의 학행과 덕행을 기리는 옥산서원과, 회재가 자주 찾았던 정혜사 십삼층석탑도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OMAR SHARIF
PARIS

# 고객과 함께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 오마샤리프화장품(주)

고기능성 스킨케어 전문 제조 기업, 오마샤리프화장품은 자연에서 얻은 성분에 차별화된 기술을 담아
주름, 미백, 트러블 등 소비자 니즈에 맞는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에고치에서 찾은 실크프로테인과 꿀벌에서 얻은 벌침액을 비롯, 돈태반과 누에실샘 등
오마샤리프화장품만의 기능성 원료 개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GMP와
화장품 국제인증 ISO-22716을 획득,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마샤리프화장품은 최적의 생산 환경에서 최상의 제품 생산을 통해
고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합니다.

●사업분야 : 화장품원료 및 생산 연구개발 / 의 · 약외품 개발 및 생산 / 화장품 브랜드 개발 / 화장품 OEM, ODM 생산
●주요 생산 제품 : Re20 / Re20링클 / Re20옴므 / 이디엄옴므 / 랑스크림 / OS실크 / 테비안 / 클렌징폼 등

OMAR SHARIF
PARIS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연암율금로 237-29 ●대표번호 : 041-912-0920 ●소비자상담번호 : 080-020-2500 ●홈페이지 : www.omarsharif-cosmetic.co.kr

# "브이리뷰 바탕 B2B SaaS 유니콘 기업 발돋움"

〈구독형 소프트웨어〉

## 윤태석 인덴트코퍼레이션 대표

### AI 챗봇 통해 쇼핑몰 상품 구매자 동영상 리뷰 서비스
### 회사 이름처럼 문단 앞 들여쓰기 "변화의 첫걸음 뗄 것"

"인덴트코퍼레이션의 '인덴트'는 '들여쓰기'를 뜻합니다. 문단을 나누고 들여쓰기를 하듯, 큰 변화의 시작에 서 있는 스타트업이 되려는 의미에서 이같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타트업 '인덴트코퍼레이션(인덴트)'을 운영하는 윤태석〈사진〉 대표는 회사 이름에 담긴 뜻을 이같이 풀어냈다. 이투데이와 만난 윤 대표는 '좋은 스타트업'에 대해 "시장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해 업계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인덴트 또한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인덴트는 동영상 리뷰 시스템 '브이리뷰'를 서비스하고 있다. 자체 특허 기술인 인공지능(AI) 챗봇이 서비스를 도입한 쇼핑몰에서 실제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의 동영상 리뷰를 수집해 이를 자동으로 올린다.

윤 대표는 "브이리뷰는 실소비자 영상 후기를 기반으로 소비자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커머스 매출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차세대 커머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커머스 시장에 몸담았던 경험이 창업의 기반이 됐다. 윤 대표는 대기업 이커머스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로 재직하면서 업계를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를 얻었다.

그는 "컨설팅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영상 후기에 노출된 잠재 고객군이 그렇지 않은 잠재 고객군과 비교해 6배 높은 구매전환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시엔 정확히 어떻게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지 구상하지 못했지만 3년 뒤인 지난해 서비스를 구체화해 브이리뷰를 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브이리뷰의 강점은 콘텐츠 생산 주체와 잠재 소비자가 같다는 것이다. 실제 구매자인 개인이 올린 동영상 리뷰가 곧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콘텐츠 제작자가 될 수 있고 다른 물건을 구매할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표는 "일반 소비자가 생산한 콘텐츠로 상품을 노출하고 소통하면서 다른 커머스 플랫폼이 가질 수 없는 커머스 신뢰도가 구축됐다"며 "정보 불균형을 해결해 신뢰 기반으로 나아갈 미래 커머스 생태계에 알맞은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매출 증대 효과도 크다. 인덴트에 따르면 동영상리뷰 위젯이 있는 경우 구매의사 전환율이 14.7% 증가한다. 상품에 대한 동영상을 사전에 볼 때 구매 가능성은 73%가량 뛰어오른다.

브이리뷰 서비스가 이커머스 분야의 기업 간 거래(B2B) 월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 대표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다.

윤 대표는 "브이리뷰는 커머스 고객의 매출에 직접 이바지하고, 그 대가로 월 구독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고객 매출을 증대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동시에 운영 비용을 낮춰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윤 대표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는 브이리뷰 서비스를 키워 B2B SaaS 시장의 '글로벌 유니콘'이 되고자 한다.

그는 "브이리뷰는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목표로 디자인하고 개발했다"며 "이미 많은 글로벌 커머스가 서비스를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글로벌 시장으로 서비스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2B SaaS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 세계 시장에는 많지만, 한국에는 아직 하나도 없다"며 "국내 '1호' B2B SaaS 유니콘을 목표로 정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다원 기자 leedw@

## 불법집회로 수감 중인 조슈아 웡 옥중서 국가전복 혐의 다시 체포

홍콩 민주화 운동가이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조슈아 웡〈사진〉이 감옥에서 다시 한 번 체포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번엔 국가전복 혐의다.

7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오전 야당 소속인 탐탁치 전 의원과 조슈아 웡을 옥중 체포했다. 앞서 전날 경찰은 국가전복 혐의로 53명의 운동권 인사를 체포했는데, 이미 수감된 두 명에게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웡의 자택을 추가 수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웡은 지난달 2일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선동한 혐의로 징역 13개월 반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탐탁치 전 의원은 과거 진행했던 인터뷰가 선동적이었다는 이유로 구류 처분을 받아 수감 중이다.

조나단 만 호칭 변호사는 "홍콩은 경찰이 이미 수감된 사람들을 체포하고 심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옥중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현재 기존 교도소에서 다른 시설로 이감됐다고 SCMP는 전했다.

체포된 55명의 인사는 지난해 홍콩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7월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는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진행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중 47명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혐의로 구금됐으며,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대부분 이날 불기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중국 정부가 보편적 참정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새로운 국가보안법으로 이들을 추적했다"며 "홍콩에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국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NASA 출신 신재원 현대차 사장 美 항공청 드론 자문위원에 위촉

신재원〈사진〉 현대차그룹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사업부 사장이 미국 연방항공청의 드론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미국 교통부는 5일(현지시간) 신재원 사장을 포함한 미국 연방항공청(FAA) 드론 자문위원회의 새 위원 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신 사장은 항공안전과 항공교통 관제기술 분야의 권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은 "드론자문위는 FAA가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원회는 미국의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통합 이슈에 대해 조언하고 국가 영공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전략 수립을 돕는 기구다. 최대 35명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 전날 12명의 결원을 채웠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신재원 사장은 2019년 9월 신설된 현대차그룹 UAM 사업부의 부사장으로 합류했다. 이후 지난해 연말 임원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신 사장은 1989년 NASA 산하 글렌리서치센터에 입사해 항공안전과 항법 시스템 연구개발을 담당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취임 3년여 만에 사임

### 대형마트 첫 여성 CEO…무기계약 1만5000명 정규직 전환 이끌어

국내 대형마트 업계 첫 여성 CEO인 임일순〈사진 왼쪽〉 홈플러스 대표가 취임 3년여 만에 사임한다.

7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임 대표는 이날 임원 대상 화상회의 도중 사임 의사를 발표했다. 임 대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적인 이유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이를 만류하다가 최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 시기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회계연도가 3월에 시작하는 홈플러스는 일반적으로 1월 중순에 새해 사업전략을 최종 승인한다. 임 대표는 이 업무를 마무리하고 떠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임 사장은 유통사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깊고 전략과 실행에 뛰어난 전문경영인으로서 홈플러스를 미래 유통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며 "CEO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전반적인 사업전략과 방향까지 완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트코, 바이더웨이 등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임 대표는 2015년 재무부문장으로 홈플러스에 합류했다. 이후 경영지원부문장(COO)을 거쳐 2017년 10월 대표이사 사장(CEO)으로 승진했다.

한편, 임 대표는 재임 기간 비정규직을 크게 줄여 국내 고용문화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CEO로 임명된 지 2년 만인 2019년 7월, 당시 홈플러스의 무기계약직 직원 약 1만50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재미동포 2세, LA경찰국 서열 2위 수석부국장 승진

### 도미니크 최 씨, 117년 이민사 처음

재미동포 2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내 서열 2위 자리인 수석부국장에 승진했다고 7일 미주중앙일보가 전했다.

25년 전 경찰 제복을 입은 도미니크 최(50·사진) 씨는 2017년 별 1개(커맨더)를 시작으로, 2019년 별 2개(부국장), 지난달 말 별 3개인 수석부국장에 올랐다. 그의 자리는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다음이다. 무어 국장이 직접 승진 사실을 최 수석부국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승진은 미주한인 이민 117년 역사상 처음일 뿐만 아니라 LAPD 설립 150여 년 역사상 한인 경관 중 처음 있는 일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LAPD 내 경찰은 98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부국장은 최 씨를 포함해 3명이다. 최 수석부국장은 신임 경찰

채용 등 인사 행정과 트레이닝 무기 사용 예산 편성 등 15개의 부서를 총괄하는 '서포트 서비스 오피스 디렉터' 직무를 수행한다.

LA에서 태어난 그는 남가주대(USC)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회계법인에서 2년간 근무하다 1995년 LAPD에 들어갔다. 퍼시픽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한인으로는 두 번째로 커맨더가 됐다.

연합뉴스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기훈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윤원습 △농촌정책국장 강형석 △축산정책국장 박범수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이주명 ◇과장급 승진 △농촌재생에너지팀장 박나영 ◇과장급 전보 △동물복지정책과장 김지현 △구제역·AI방역대책 상황실 지원근무 강혜영

◆**서민금융진흥원** ◇신규 선임 △금융본부장 김진휘

◆**코스콤** ◇신규 선임 △전무이사 권형우

◆**아주IB투자** △벤처투자1본부장 윤창수 △리스크관리본부장 허병두 △PE투자본부장 김태승

◆**관훈클럽** △서기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 △기획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회계 김대영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편집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감사 홍지영 SBS 편집부 선임기자·신지홍 연합뉴스 국제에디터 △편집위원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한장희 국민일보 산업부장·이민종 문화일보 산업부장·김상연 서울신문 논설위원·이강은 세계일보 사회부장·김홍수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주현 한겨레신문 정치부장·박준동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임세흠 KBS 통일외교부 차장·이주승 MBC 보도국 부장·이종수 YTN 경제부 부국장

◆**아주경제** △건설부동산부장 강영관

◆**데일리동방** △산업부장(부국장) 김창익

## 부음

### 미국에 윤동주 알린 시인 최연홍 씨

지난해 '윤동주 문학'을 창간하는 등 미국에서 윤동주 시인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최연홍 시인이 뉴욕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고 동생인 최혁 전 제네바 대사가 7일 전했다. 코로나19로 조문과 장례예배는 화상인 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 영동 출신인 고인은 연세대 재학 중 현대문학으로 등단했고, 미국 인디아나대에 유학한 뒤 정착해 위스콘신대, 올드도미니언대, 미시시피대, 워싱턴대 등에서 교수로 역임했다. 1981년 미국 국방장관 환경정책보좌관을 맡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왔던 인연으로 귀국한 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수로 지내기도 했다.

강단에 서면서도 많은 시와 소설을 쓴 그는 윤동주상 특별문학상(2009년), 윤동주 서시 해외작가 특별상과 해외한국문학상(2016년)을 받았다. 특히 그의 시 '애리조나 사막'은 한 매체로부터 '미국 남서부를 그린 최고의 시편'으로 선정됐고, 단편소설 '쇼트 스토리 인터내셔널'은 미국 대학 교재에 수록되기도 했다.

▲**정길순** 씨 별세, **윤석준**(제일기획 부사장)·**희준**(쿠첸 마케팅본부장)·**은숙**·**효심** 씨 모친상, **송현정**(KBS 통일외교부장)·**한송이** 씨 시모상, **이만재**(철원 의용소방대장)·**장영지**(지에이팹텍대표) 씨 장모상 = 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9일 오전 11시 30분, 02-3410-3151

▲**이종근**(전 동부제철 대표이사 부회장) 씨 별세, **이영희** 씨 남편상, **이혁호**(뉴성민병원 의사)·**원민**(가나가와치과대학 의사) 씨 부친상 = 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오전 11시, 02-2072-2028

▲**김경덕** 씨 별세, **조응래**·**재형** 씨 모친상, **조상인**(서울경제 문화레저부 차장)·**현구**·**현철**·**현준** 씨 조모상 = 7일 경남 고성 영락원장례식장 특3호, 발인 9일 오전 7시, 055-672-4444

▲**라춘자** 씨 별세, **김의재**(위키리크스 한국 부장) 씨 모친상 = 7일,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4호, 발인 9일 오전 5시 30분, 02-2030-7904

▲**윤창국** 씨 별세, **윤석진**(DGB대구은행 성서공단영업부 금융지점장)·**영진**(㈜티마운트 부장) 씨 부친상 = 6일,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206호, 발인 8일 낮 12시, 053-200-6146

▲**김범명**(14·15대 국회의원) 씨 별세, **이영숙** 씨 남편상, **김수연**·**희석**씨 부친상, **이우현**(OCI 대표이사 부회장) 씨 장인상 = 6일, 추모행사 8일 오전 11시, 장지 경기도 이천 에덴낙원, 02-548-4912(가족장으로 빈소는 따로 마련하지 않음)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일본 아오야마학원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

# 개도국에 불공정한 탄소국경세

**2023년부터 EU가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을 EU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탄소배출세는 자국 기업에만 부과하는 반면 탄소소비세는 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소비세로의 전환, 즉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것이 우월전략 균형이다.**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라는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그 세부사항을 EU 집행위원회가 준비 중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관세면 관세지, 국경세(보다 정확한 표현은 국경조정)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이 EU에서 생산되면 단위당 100원의 탄소배출세가 부과되고,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개도국)에서 생산되면 단위당 10원의 탄소배출세가 부과된다고 하자. EU 기업들은 해당 개도국 기업들에 비하여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당 개도국으로 옮길 것이다. 이를 규제 바구니로부터의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라 부른다. 탄소누출 현상을 막기 위하여 EU가 모든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유럽 생산 시와 동일하게 단위당 100원의 탄소배출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하게 관세가 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위배된다. 실제 과거에 비슷한 사례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한 경험도 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 초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된 것이 탄소국경세다. 과거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탄소배출세를 명목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탄소소비세로 전환한 것이다. 앞선 예를 빌리자면, A라는 상품이 EU에서 소비될 때 원산지 상관없이 단위당 100원의 탄소소비세를 부과한다. 물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받아서 대납하는 방식이기에, 자국 상품의 경우에는 과세 방식에 변화가 없다. 반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경우에는, 개도국에서 생산 당시 10원의 탄소배출세를 냈다면 탄소소비세 100원에서 그만큼을 제한 90원만 국경 통과 시 부과하고, 추후에 100원을 소비자에게 받아서 충당하라고 한다. 이는 명목상 해외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탄소배출세가 아니고 자국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탄소소비세이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의 관세도 아니고 WTO가 개입할 명분도 별로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일한 상품이라도 탄소 소비량을 생산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많은 개도국들은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 비중이 현저히 높다. 탄소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도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에는 높은 탄소소비세가 부과된다. 동일한 상품이라도 EU산에는 100원의 탄소소비세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500원의 탄소소비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결국 탄소국경세는 '탄소누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를 막는다는 거대한 기치를 내걸었으나, 실상은 WTO의 자유무역주의를 교묘하게 빠져나간 선진국들의 자국산업 보호 조치이고, 개도국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된다.

2023년부터 EU가 탄소국경세를 시행하면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을 EU에 수출하는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탄소배출세는 자국 기업에만 부과하는 반면 탄소소비세는 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소비세로의 전환, 즉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것이 우월전략 균형이다. 일단 EU에서 국가별 상품별 탄소 함유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탄소국경세를 실시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를 빠르게 도입할 것이다. 머지않아 모든 국가들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그 적용 범위 또한 '에너지' '전력산업'이라는 뇌관을 타고 전 산업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현재 탄소국경세를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나라는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탄소국경세는 우리에게 수출물량의 조정 정도가 아니라 에너지, 전력 공급구조부터 바꾸라는 경고가 될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은 우리 기업들을 탄소국경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탄소국경세를 앞세운 선진국들의 선전포고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탈원전'이 아닌 '탈화전'이라는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할 처지가 되었다.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공정채용을 가로막는 것들

최근 JTBC 드라마 'H.U.S.H'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기업 채용 불공정 취재와 인턴 여기자의 자살을 둘러싼 언론사 구성원의 이야기로 흐르고 있다. 자살 원인은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턴 동기들과 달리 정규직 입사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중앙일간지 기자라는 꿈이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2~3%대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시청하는 이유는 순전히 개인적 경험 때문이다.

3년 전 필자는 금융과 언론 분야에서 청년층 공정채용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정부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적이 있다. 당시 연구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언론과 금융권 공정채용 현실이 이 드라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무엇보다도 연구 중 만난 지방 국립대 출신 여성 구직자와 드라마 속 인턴기자가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만난 여성은 중앙언론사 입사를 위해 3년간 기사 작성, 취재, 인턴경력, 서울에서 언론고시 스터디, 중앙일간지 출신이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의 청강 등 온갖 노력을 해왔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녀가 나에게 들려준 "서울 중앙일간지에서 지방은 언론의 변방"이라는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금융사과 언론사는 대부분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처럼 인식되어 있다. 다른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채용 공정성이 요구된다. 국민 정서와 괴리된 채용구조는 국가, 기업,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연구결과 서울 중앙일간지에 지방대생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드라마에서도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지방에서 그렇게 유명한 대학 출신이면 지역신문 기자 하면 되겠네." 또 "매일 한국에 지방대 출신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내가 알기론 없는 것 같은데"라고 답하는 장면도 나온다. 중앙일간지가 지방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압권은 "취재원 앞에 그런 기자가 있으면 취재원이 어떻게 보겠니"라는 편집국장의 대사이다. 중앙일간지들의 언론 정보 공공성과 공신력 획득이 바로 서울 중심의 학맥 카르텔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학벌을 가진 사람한테 진실을 말할 것이라는 선입견의 은유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입견을 편집국장의 입으로 확인시켜 준다.

드라마에서 부정 채용청탁 기업이 은행권은 아니지만 청년 구직자들의 은행 입사를 위한 공정채용 열망은 상상 이상이다. 은행권 근속 연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짧아지고 있음에도 청년 구직자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는 순전히 근로조건 때문이다. 1990년대 필자가 구직자 시절 응시한 은행은 3급 공무원, 영관급 군인, 대기업 이사 이상 친척을 입사지원서 쓰게 했다. 요즘 보면 불공정 채용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금융 영업이 기득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관제금융 역사에 기인한 채용방식이었다.

MBC 시사프로그램 보도에 따르면 현재 채용비리로 재판 중인 은행은 법정에서 "점수 순서로만 합격자를 정하면 SKY 출신자들이 부족해 대학별 균형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중의적 의미이다. 은행 경영이 여전히 서울 중심의 학벌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조직 구성원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조직 구성원은 최소한 자신과 동질적인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조직의 미래를 안정감 있게 가지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 비율이 무너지면 조직과 기관의 명성이 쇠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 채용 공정성은 블라인드 채용 같은 절차상의 투명성과 합리성보다 지방을 변두리화하는 서울 중심의 경제, 정치구조와 학벌 카르텔 해결 없이는 요원하다. 공정채용은 기업의 이윤을 창출시킬 인재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기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 발전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경영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투데이, 말투데이

☆ 스티븐 호킹 명언

"인생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영국의 이론물리학자. 21세에 루게릭병에 걸려 50여 년을 병고에 시달렸다. 우주와 양자 중력에 관한 뛰어난 연구로 갈릴레이·뉴턴·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현대 물리학의 대표 학자이다. 그는 '시간의 역사' 등으로 과학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2~2018.

☆ 고사성어 / 성중형외(誠中形外)

마음속의 참된 생각은 자연히 밖으로 드러난다는 말. 속에 품은 순수한 마음은 숨기려고 하지만 저절로 밖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대학(大學) 성의장(誠意章)에 나온다. "소인이 한가하게 있을 때면 착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다가 군자를 보면 씻은 듯이 그의 착하지 못한 것을 감추고 그의 착한 것을 나타내려 한다. 그러나 남이 날 보기를 자기 속 들여다보듯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것을 일러 속에 참된 것이 있으면 밖에 나타난다고 한다[此謂誠於中形於外]."

☆시사상식/스테이케이션(Staycation)

휴가를 멀리 가지 않고 차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보내고 잠은 집에서 자는 것을 뜻하는 말. 'stay'와 'vacation'의 합성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유행하면서 호텔이나 마사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 신조어 / 자삭

'자신 삭제'의 줄임말. 자신이 올린 자료를 스스로 지운다는 뜻.

☆ 유머 / 황당한 부부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차를 세우고 축하한다며 "'이달의 안전 운전자'에 선정되셨습니다. 500만 원 상금은 어디 쓰실 겁니까?"라고 물었다. 남편이 "감사합니다. 우선 운전면허를 따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하자 아내가 말을 잘랐다. "어머!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남편이 술 마시면 농담을 잘해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 기자수첩

이 다 원 IT중소기업부/leedw@

# 웃기기만 해주세요

스타트업계에 유명한 글이 하나 있다. 이른바 '창업 21계명'이다. 글은 "아들아, 너는 창업 전에…"로 시작한다. 가상의 부모가 창업을 꿈꾸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다.

내용은 '웃프(웃기고도 슬프)'다. 가상의 아버지는 번호를 매겨가며 살뜰히 체크한다. "투자자는 많지만 네게 투자할 돈은 없으니 착각 말아라"라는 일침이 압권이다. 투자자들에 대한 냉소와 정부 정책자금이 '하늘의 별따기'란 지적도 담겨 있다.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외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있다. "우린 인감증명서 내기 위해 창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사무실은 등기소 주변에 구하고, 정부가 모태펀드를 풀지만 너를 위한게 아니니 투자 없이도 일 년쯤은 버틸 수 있어야 한다" 등 '꿀팁'이 들어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된 글에는 '공감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정말 웃픈 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창업자로서의 조건이란 점이다. 상상 속 아버지는 첫 번째 질문부터 나이가 만 40세가 넘지는 않았는지, 카이XX나 S대 졸업장은 있는지, 신용점수는 확인해 봤는지 묻는다. 카카X나 네이X 등 굴지의 IT 대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은 있느냐 물음도 이어진다.

국내 스타트업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창업가의 조건이 나이와 학벌, 그리고 대기업 입사경력이란 점은 씁쓸하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너의 팀은 형편없다"는 코멘트가 글 말미에 나오기도 한다. 그만큼 당신과 팀이 스스로의 사업성과 혁신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뜻이겠지만 이 조건만 맞추면 고평가도 가능하단 의미로도 들린다.

이미 업계를 한 바퀴 돌았던 해묵은 글을 연초부터 다시 꺼내는 이유는 올해는 이 계명이 그냥 웃긴 글에 머물길 바라서다. 스타트업 시장이 성숙했고, 창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선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이 글은 우스운 글에만 머물 것이다. 대기업에 다니지 않았어도,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성공한 창업가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종훈

논설실 (02)799-2669
자본시장부 (02)799-2648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3
금융부 (02)799-2665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사회경제부 (02)799-2612
부동산부 (02)799-2637
뉴스랩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6741
산업부 (02)799-2644
사진팀 (02)799-6745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슈&인물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이희주 웨이브 정책기획실장

# "국내 OTT, 넷플릭스 천하 만들 건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의 희비가 엇갈렸다. 극장과 공연장은 줄줄이 문을 닫았지만, 비대면 콘텐츠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호황을 맞았다. OTT를 '코로나가 키운 산업'이라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지난해 OTT 시장의 성장은 눈부셨다.

OTT 산업이 폭발적으로 크면서 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바로 'OTT 콘텐츠에 부과되는 음악 저작권료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콘텐츠에 부과할 음악저작권료율을 1.5%로 확정했다. 이에 OTT 업계는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선 상황이다.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웨이브 사옥에서 만난 이희주(51) 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은 문체부의 결정을 두고 "미디어 산업에 대한 현실 인식 부재를 나타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의 참여사인 웨이브에서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그를 만나 OTT 시장의 현주소와 향후 대응, 웨이브의 발전 방향 등을 들어봤다.

이희주 웨이브 정책기획실장이 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며 보드에 국내 미디어 산업의 현황을 표로 그려가며 설명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OTT 음악저작권료 1.5% 확정**
**업계는 "0.625%"…행소 검토**
**플랫폼 살아야 콘텐츠 산업도…**
**문체부, 미디어 산업 이해 없어**

**신산업 OTT 규제가 답 아니다**
**지상파·케이블 규제를 낮춰야**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플러스 상륙**
**일시적 호황…하도급 전략 우려**

### 높은 저작권료율, OTT 성장 발목

문체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 저작권법은 공연이나 방송 등에서 대중가요나 연주곡 등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일정 비율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돼 있었다. 신산업인 OTT는 기존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음악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은 OTT 사업자에게도 음원 저작권료를 부과할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음저협은 관련 매출의 2.5%를 주장했고, OTT 측은 기존 VOD 징수규정을 근거로 0.625%를 제안했다. 결국, 문체부는 요율을 1.5%로 확정하고, 연차계수에 따라 상향해 2026년 이후에는 1.9995%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OTT음대협은 즉각 행정소송 검토에 착수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롯데컬처웍스, 카카오페이지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현재 OTT 사업자들이 방송과 전송을 동시에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OTT 업계가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적정 요율이라고 본 이유다.

이희주 실장은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OTT 플랫폼을 고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동시에 현재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의 공세로 전시상태인데도 문체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체부는 미디어에 대한 인사이트(insight.이해)가 없다"며 "플랫폼이 살아야 콘텐츠 산업도 산다"고 말했다. 즉, 높은 비율로 음악저작권료율이 부과되면 OTT 플랫폼의 성장에 발목이 잡히고, 플랫폼이 힘들어지면 콘텐츠 산업도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이 실장은 음악저작권료율이 오르면 이를 기점으로 다른 저작권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서도 나서서 저작권료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며 "OTT 플랫폼은 그러면 클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낙관하지만은 않고 있다. 그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 한국 영화 제작사들, 하청 업체 전락

이 실장은 지상파, 케이블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규제를 OTT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거꾸로 OTT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현 미디어 시장을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의미다. 이 실장은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 영역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국회 등이 한국의 미디어 주권 상실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는지의 여부"라며 "이는 OTT 법제화의 출발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정확한 현실 인식하에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OTT 법제화는 과기부, 문체부, 방통위 등 각 정부 부처에서 흩어져 진행되고 있다. 이 실장은 법제화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했다. 표면적으로 OTT 산업을 정의하는 등 규제 내용이 없더라도 향후 그 법이 바탕이 돼 목을 조를 수 있어서다. 웨이브 출범 전 '푹(POOQ)'으로 서비스되던 2019년 2월 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하겠다는 '통합방송법' 추진에 앞장서서 반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넷플릭스에 더해 디즈니플러스도 올해 한국 진출을 확정하면서 토종 OTT가 받는 압박 수위는 더 높아졌다. 이 실장은 "디즈니플러스가 진출하면 넷플릭스에 대한 견제 역할도 할 수 있지만, 토종 OTT 시장은 전반적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넷플릭스가 현지화했듯 디즈니플러스도 현지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한국 콘텐츠 산업은 일시적인 호황기를 누릴 수 있다. 이 실장은 '일시적'이라는 데 방점을 찍어 말했다.

그는 "플랫폼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제작사들이 호황을 누리겠지만, 글로벌 OTT 중심으로 미디어 플랫폼이 재편되면 장기적으로 그들의 하도급 업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디어는 산업 이전에 문화"라며 "한국의 플랫폼을 지켜내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 토종 OTT 간 콘텐츠 공동 투자 검토

2019년 9월 출범한 웨이브는 현재 영화 6000여 편을 포함해 25만 편의 영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는 지난해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 중 유료 가입자의 비중은 20%를 웃돈다.

웨이브는 SKT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가 세운 콘텐츠연합플랫폼의 푹(POOQ)이 통합해 만들어진 만큼 지상파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었다. 최근에는 영화,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등 해외 시리즈에 더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실장은 "'웨이브는 지상파 프로그램 보는 곳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중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웨이브를 구독하는 사람 등 다양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주년 간담회에서 웨이브는 2020년에 15편 이상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웨이브는 드라마 'SF8(에스에프에잇)', 예능 '어바웃 타임' 등을 선보이면서 그 약속을 지켰다.

올해 웨이브는 'SF8(에스에프에잇)'처럼 지상파 편성 이전에 웨이브 플랫폼에 선공개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동시에 웨이브에서만 독점 공개하는 콘텐츠 제작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여러 국제 영화제를 온라인 상영한 것처럼 올해도 영화제들과의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 진출에도 다시 속도를 내 동남아 시장에서 성과도 낼 계획이다.

이 실장은 토종 OTT 간 협력도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카카오TV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웨이브에서 제공했던 것처럼 올해도 이 같은 동맹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콘텐츠 제작에 토종 OTT가 공동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글로벌 OTT에 대항하는 의미로 대형 콘텐츠를 공동투자로 만드는 데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OTT 시장이 꽃 피우기도 전에 고사하지 않도록 저작권 이슈, 법안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사설

# 여당의 시대착오적인 복합쇼핑몰 휴업 규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 이어, 대기업이 운영하는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도 같은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그 일대의 대형마트 출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당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여당이 복합쇼핑몰의 업태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법을 또 밀어붙여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상공인 피해만 키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전통시장과 별 관련이 없다. 주로 대도시 교외에 자리잡고 있고, 쇼핑과 레저·오락을 함께 즐기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소비 공간이다. 상업시설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대형마트는 대기업의 직접적인 유통채널이지만, 복합쇼핑몰은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을 한데 모으고 점포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규제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소비자들의 쇼핑은 온라인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속화하는 추세다. 이미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부진을 견디지 못해 오프라인 매장을 잇따라 폐점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프라인에만 매달려 대형 쇼핑몰과 전통시장을 대립적 구도로만 보고 대기업에 대한 압박에만 골몰한다.

규제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2012년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어난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도심을 벗어난 곳에 있는 탓에 주말 이용객이 절대적으로 많고 매출도 그때 집중된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만으로도 매출이 3분의 1가량 쪼그라들 것이라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 타격은 오히려 매장에 입점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쇼핑몰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의 매출이 줄고 그곳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 쇼핑몰이 위치한 지역경제도 피해를 입는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가라앉고 유통 등 대면(對面) 업종의 추락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악의 부진에 빠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과 관련된 기존 규제도 풀어야 할 판인데 기업활동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덧씌우고 있다. 전통시장 살리기와 무관하고, 소상공인과 일자리의 피해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편익도 무시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우리말 한 토막

# 건배와 수작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 매년 연말연시에는 술집 곳곳이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다. 술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는 이들도 여럿이었다.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뒤덮은 이번 연말연시는 예년과 달랐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했기에 자연스레 술집으로의 발걸음이 멀어졌다. 대신 집에서 독작(獨酌)하거나 대작(對酌)으로 가볍게 술을 마시며 차분하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이 많았겠다.

건배(乾杯)의 사전적 의미는 술좌석에서 서로 잔을 들어 축하하거나 건강 또는 행운을 비는 것이다. 한자에서 알 수 있듯 '잔을 마르게 하다', 곧 한번에 남김없이 다 들이켜는 것을 의미한다. 건배 풍습은 고대 바이킹족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 사용하던 술잔은 대부분 아래쪽이 뾰족하여 세워 둘 수 없어 한꺼번에 다 마셨다는 데서 유래한다. 또 건배 때 잔을 부딪치는 것은 서로의 잔에 술이 튀게 하여 독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건배처럼 술자리 문화와 관련한 말이 있다. '수작(酬酌)'이다. 수작은 술을 권하고(酬) 따른다(酌)'는 뜻이다.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여 따라주면, 손님도 답례로 주인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이다. 이렇게 술을 권하면서 서로 잔을 주고받으면 이야기도 하게 되므로 '서로 말을 주고받음'이라는 뜻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부정적 의미로의 쓰임이 많다. '수작을 부리다' '뻔한 수작' 등과 같이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 등을 낮잡아 이를 때 쓰인다.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에 이 세 가지 의미로 수작을 두루 쓴 것으로 보아 술자리 문화와 관계가 많은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술자리 문화와 관련한 말이 또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짐작(斟酌), 참작(參酌)도 이에 해당한다. 일의 형편 등을 어림잡아 헤아린다는 뜻의 짐작(헤아릴 짐, 술 부을 작)은 술을 따르는 행위와 관련 있다. 술을 따를 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헤아려 따른다는 데서 유래했다. 참작(참여할 참, 술 부을 작) 역시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함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주량을 고려하여 술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한 말이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 왜 삼성화재 RC가 좋을까?

**| 우수인증설계사 수 2020년 1위 |**

판매/효율/윤리성 기준으로 손해보험협회가 공인한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이 삼성화재RC (점유비 36.2%)
*20년 손해보험협회 발표 기준

**| 24시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

보장분석부터 가입, 관리, 보험금 청구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서명 계약서로 환경보호까지!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2810호 (브랜드전략파트, '20.08.07)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